

전략연구 2016-10

충남 벤처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기업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김 양 중

발 간 사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신흥국들의 경제성장 둔화,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 국가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경기 부양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출의 둔화 및 감소에 따라 산업구조의 개선과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남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기업 위주로 성장한 충남의 산업구조에서 생겨난 다양한 문제점인 소득의 역외유출, 분공장 논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충남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가치사슬 상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남 벤처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 기업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 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며, 본 연구가 충남 벤처기업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발전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산업경제연구부의 김양중 박사와 본 보고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도움과 수고를 해주신 원내외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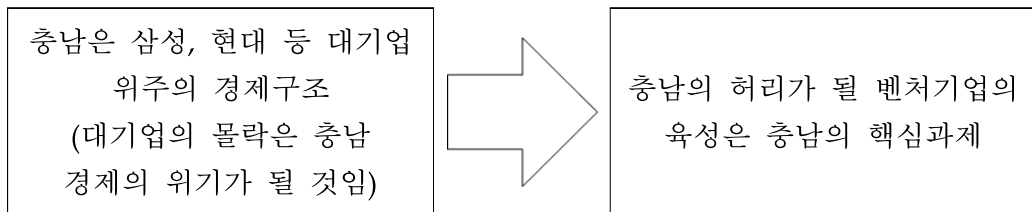
연구 요약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충남은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위주로 성장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의 역외유출, 분공장 논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충남 1위 기업의 2010년 총 부가가치는 7.6조로 충남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5위 기업까지가 충남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은 수많은 하청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1위 기업의 몰락은 충남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충남의 허리를 거뜰히 지탱하고 지역의 혁신주체가 될 벤처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이에 본 연구는 충남 벤처기업 가치사슬 상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책입안자와 벤처기업간의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벤처기업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홍기(2014)는 충남 벤처기업의 투자금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은 고용창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새로운 미래 산업의 발굴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임형빈(2014)은 위험을 수반하는 벤처기업을 대기업보다 위험이 큰 신산업분야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창출형 기업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벤처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윤준(2011)은 기술기반 벤처기업이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운철, 정재용, 양현모 (2005)는 혁신주체로서 벤처기업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벤처정책의 질적 내실화의 실패, 기술혁신 및 사업화에 대한 형식적 지원, 단일 요소에 대한 집중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벤처기업과 관련된 육성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존의 기업 구조를 다변화하여 지역의 산업구조 리스크를 보완하고, 지역에 토착화된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벤처기업의 자금분야에 국한된 연구로 벤처기업 경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국 단위의 분석을 통해 국내의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결과를 제시하여, 지역단위 벤처기업의 특성이나 충남의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3) 국내 · 외 창업 및 벤처산업 지원정책

우선 국내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13. 5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3. 6월 '[창조경제실현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하였다.

세부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이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릴 수 있는 서울형 산업의 집중적 육성을 목표로 벤처산업을 서울형 산업으로 규정하고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벤처기업들의 1회 방문으로 모든 고충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벤처기업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입지,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금지원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지원, 운영자금 융자지원, 특별 신용보증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 자금지원, 입지지원,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인천시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시는 벤처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타운 조성 등 입지지원과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벤처닥터제와 같은 행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국가 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덕벤처-테크노밸리 조성계획(TVTV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시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겹치면서 기초자치단체들도 활발한 산업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자생적인 지역혁신시스템(RIS)의 구축과

연계한 벤처 기업의 생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실리콘 벨리 내에는 주요 구성주체인 벤처기업·대학 및 연구소·벤처캐피탈·전문서비스 회사(법률자문·컨설팅회사) 등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국내 시장의 한계로 인해 창업초기부터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내에서의 자본 조달과 IPO(기업공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및 해외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혜택·보조금 지급·보증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벤처캐피탈·인큐베이터의 적절한 자금 지원 및 벤처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핀란드는 경제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창업단계에서 벤처캐피탈 시장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공적투자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올루 테크노폴리스 중심으로 주요 대기업인 노키아와 벤처기업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공존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만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특징은 미국의 실리콘 벨리를 벤치마킹하여 정부 주도적인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민간주도 운영과 더불어 자율적인 혁신시스템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신축 과학공업단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집약적이고 첨단기술지향적인 발전 모델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특징은 정부주도의 벤처집적단지 조성·창업보육센터 설립·벤처투자자금 조성 등의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정책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대표적 지역혁신 클러스터인 '중관촌'의 초창기 벤처기업들은 중국과학원·북경 대학·청화대학에서 직접 창업한 기업들로서 연구소와 연구기관에서 파생된 벤처기업의 유형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IT산업부문이 세계시장점유율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해 있는 인도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내수시장의 한계로 수출지향적인 벤처정책 지원이 주를 이루며, 특히 IT산업 발전의 중심지인 방갈로 지역은 우수대학과 연구기관의 밀집·영어 및 컴퓨터에 능통한 인재·저렴한 인건비 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2. 충남 벤처기업 현황 및 문제점

1) 충남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벤처기업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2014년 12월 기준 1,020개로 전국대비 3.41%로 전국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지역총생산이 전국 3위이고 중소기업 종사자수가 전국 4위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하여 벤처기업의 지역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 평가된다.

2) 제조업 중심의 벤처기업

충남 제조업기반 벤처기업 비중은 88.63%로 세종(92.86%), 경남(91.01%), 경북(90.19%), 인천(89.64%) 다음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충남은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처리 S/W, 연구개발서비스 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충남 소재의 벤처기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충남 벤처기업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①	②
충남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벤처기업 <div>(지역총생산 전국 3위) BUT (벤처기업수 전국 9위)</div>	제조업 중심의 생태계 <div>제조업기반 벤처기업 비중 (88.63%)</div>
→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생산, 투입, 마케팅 단계에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함	

3.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충청남도 소재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2015년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의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충청남도 벤처기업 가치사슬 상의 문제점 도출 및 이를 통한 올바른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치사슬을 투입, 생산, 마케팅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대한 요약 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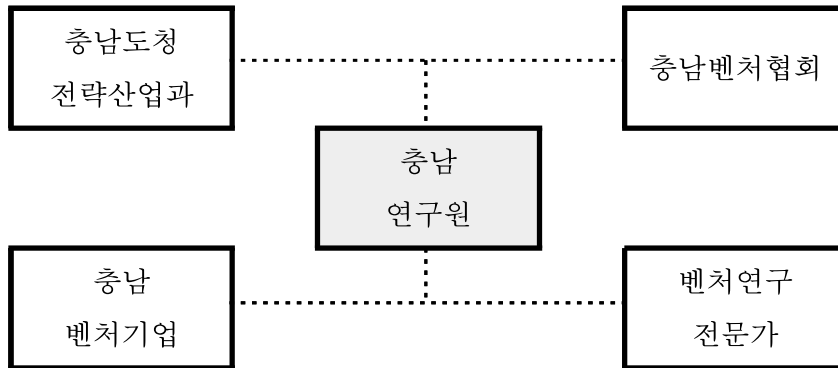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시간적 범위	2015년
내용적 범위	가치사슬 상의 문제점 도출 및 육성방안 제시

2) 연구의 추진체계

기초자료 및 충청남도 추진정책 현황은 충남도청 전략산업과와 협조를 통해 확보하며, 충남벤처협회 및 벤처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충남벤처기업 FGI를 통해 올바른 벤처기업 육성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추진체계>



3) 연구의 자료 및 방법

가. 연구의 자료

벤처기업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이며,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지역별로 층화추출된 표본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비교가 용이하고 지역의 벤처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충남 지역의 조사기관을 통한 별도의 조사도 가능하나, 이는 본 연구가 유의미한 경우에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발표자료는 분석이 불가능한 총계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일부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는 비공개 자료이며 중소기업청에서만 관리하여 전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1 벤처기업 매출액

2014년 벤처기업 매출액 합계



214.6조원

기업 당 매출액



71.9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벤처기업
11.2% ↑

대기업
0.4% ↑
중소기업
4.4% ↑

2 벤처기업 고용

2014년 벤처기업 근로자 수 합계



71만
7천명

전 산업체 근로자 수의 4.7%



기업 당 근로자수



24명

6.2배



3.9명

전년(22.6명) 대비 6.2% ↑

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수
('13년 기준)

3 벤처기업 기술혁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총
매출액의
2.9%

3.6배

중소기업
0.8%
대기업
1.4%

2.1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비율

기업부설연구소
56.7%



벤처기업
70.6%

6.5배



일반
중소기업
10.8%

연구전담부서 13.9%

4 벤처기업 업력

벤처기업 평균업력('14년 말 기준)



9.2년

↑ '13년말(9.0년) 대비
2개월 증가

'14년 신규 확인 벤처기업 평균업력



2014년
3.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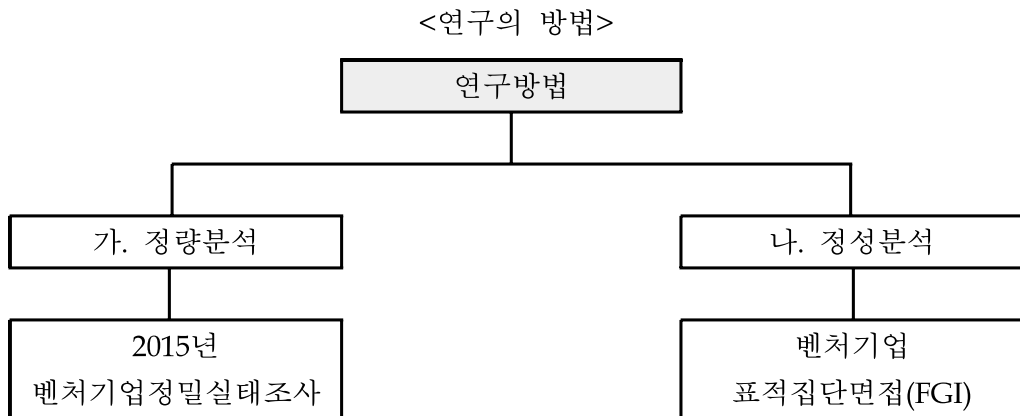
2013년
4.2년

창업 후 벤처기업
진입기간 단축
-5개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2014년 12월 말 기준 29,844개 벤처확인기업(예비 벤처기업 제외)을 조사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자료로써,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업종(8대 업종), 고용규모(5개 규모)로 비례할당을 실시하고, 표본 추출 시 해당 셀(cell) 내의 사업체를 지역별로 정렬 후 계통추출을 통해 총 2,227개의 유효표본을 획득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방법을 요약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4)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지역별 시장세분화를 실시하고, 벤처기업의 가치사슬 단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가치사슬은 기업활동에서 포괄적인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이며, 마이클 포터(M. Porter)가 모델로 정립한 이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이론틀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기능·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 후 타시도와의 문제점을 비교함으로써 충남 벤처기업의 위상을 살펴보고 충남차원의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투입, 생산, 마케팅 단계별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4. 충남 벤처기업 실태분석

1) 벤처기업 그룹인터뷰 분석결과

<1차 그룹 인터뷰>

	주요내용	구분
A	① 초기창업지원 필요 ② 개발관련 장비 및 자금부족 ③ 지식 집적화 공간부족 ④ 해외마케팅 지원필요	교육지원 자금지원 공간지원 마케팅 지원
B	①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과 조직이 필요 ② 엔젤투자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 ③ 초기창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 ⑤ 창업초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3~7년 '허리'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 ⑥ 지원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정비와 인적자원지원	공간지원 자금지원 교육지원 마케팅지원 정착기업지원 인력지원
C	①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이 필요 ② 기업가 정신함양 교육 ③ 주력산업 위주지원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지원확대 ④ 창업 후 3~7년 업체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	공간지원 교육지원 정착기업지원
D	①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원필요 ② 초기 창업자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 ③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지원

<2차 그룹 인터뷰>

	주요내용	핵심
A	① 기존 제조업기반, 40대 후반 네트워크에서 젊은 CEO 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필요	네트워크지원 경영지원

	②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벤처유도 및 벤처기업 선배 CEO들의 경영자문 사업 필요 ③ 벤처협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필요	
B	① 개인투자조합의 육성 필요 ② 수출지원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구축이 필요 ③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독립몰, 온라인 홍보 지원을 위한 전문 서비스 회사 육성 필요 ④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마련 필요 ⑤ 창업성공 사례 홍보, 기존성장기업의 스핀아웃 형태의 창업유도 사업필요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 교육지원
C	① 벤처기업 인력수요를 위한 정책 필요(정주여건, 문화, 급여 등) ② 지역벤처를 위한 지역벤처 우선협상 혜택이 필요 ③ 벤처창업을 위한 서류나 방법, 자금, 입주 공간 등 사전교육이 필요 ④ 사업관련 인프라(세일즈 & 마케팅)가 부족 ⑤ 수도권 및 해외벤처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부재(소통의 장 마련 필요) ⑥ 벤처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 필요(성남시의 벤처밸리 벤치마킹 필요)	기업환경개선 교육지원 마케팅지원 네트워크지원
D	① 인력수급 문제해결이 필요(주변에서 공급되는 학생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적응 하더라도 충남도내 기업들을 거쳐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음) ② 정착에 성공한(3~5년차 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③ 정책 입안자와 기업가 간의 지속적인 간담회 필요 ④ ICT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꼭지를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인력지원 경영지원 네트워크지원
E	① 충남의 경쟁력(기업환경, 인재 등) 강화 필요 ② 충남의 스타기업 육성 시스템 필요	기업환경개선 공간지원

③ 벤처 집적단지나 사업 확장을 위한 공간 필요 ④ 네트워크, 협동화 사업 등 기반마련 필요 ⑤ 지역제품 사용 및 입찰 시 가점제도 필요 ⑥ 노무, 인사, 특허, 수출입, 관세, 마케팅, 특허 등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 필요	네트워크지원 경영지원
--	----------------

2)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분석결과

가. 분석항목

본 절에서는 충남벤처기업의 일반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투입단계, 생산단계, 마케팅 단계에서 충남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항목>

투입	생산	마케팅
(재무 및 자금현황)	(기술 및 산업재산권현황)	(마케팅 및 해외진출현황)
지분구조	보유기술 산업재산권	지분구조
정책지원여부	해외특허 국제규격 획득여부	정책지원여부
정책지원금액	주력제품개발단계	정책지원금액
신규자금조달규모	제품 및 서비스 구조	신규자금 조달규모
자금조달방법	기술력 수준	자금조달방법
R&D투자규모	연구개발 역량	R&D투자규모
스톡옵션 활용	제품경쟁력	스톡옵션 활용

나. 일반현황

<일반현황 시사점>

- ☐ 충남은 창업 및 초기성장기 벤처기업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벤처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함
- ☐ 충남은 제조업 기반 벤처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지식기반 벤처기업 양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 필요
(제조업기반 → 지식기반으로 구조변화 필요)

다. 투입단계(재무 및 자금현황)

<투입단계 조사분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분구조	정책지원 여부	정책지원 금액	신규자금 조달규모	자금조달 방법	R&D투 자규모	스톡옵션 활용

<투입단계 시사점>

- ☐ 충남 엔젤투자펀드의 확대와 충남 벤처캐피탈 설립을 검토하고, 개인투자자와 벤처기업 간 매칭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
- ☐ 충남은 용자위주의 벤처기업 지원에서 R&D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R&D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의 조성이 타시도보다 늦은 만큼 충남엔젤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 및 지역 엔젤투자자의 적극적 발굴이 필요
- ☐ 설비투자 중심에서 R&D투자 중심으로 생태계 유도(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중심으로)
- ☐ 스톡옵션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 스톡옵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필요

라. 생산단계(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생산단계 조사분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유기술 산업재산권	해외특허 국제규격 획득여부	주력제품 개발단계	제품 및 서비스 구조	기술력 수준	연구개발 역량	제품 경쟁력

<생산단계 시사점>

- ☐ 충남은 IT, BT, ET 등 다양한 기술이 공존하는 지역이니 만큼 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CT분야는 전략적 육성 필요)
- ☐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록보유건수가 수도권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데 산업재산권이 취약할 경우 경쟁 벤처기업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 특히 해외규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없어 독자적으로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대해 민간 컨설팅 등의 전문가를 통해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 등을 대행하고 인증획득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
- ☐ 영세벤처기업이 많은 충남은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한데 교육기관을 벗어난 벤처기업이 새로운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타운의 건설이 중요
- ☐ 충남은 기술 경계선상에 있는 한계 벤처기업들이 많아 이들 기업을 국내 또는 세계 최고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
- ☐ 충남의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한계기업이 많고 벤처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R&D를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구조성이나 R&D 융복합 센터의 조성이 필요(특히 디자인경쟁력, 품질경쟁력에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요)

마. 마케팅단계(마케팅, 해외진출 현황)

<마케팅단계 조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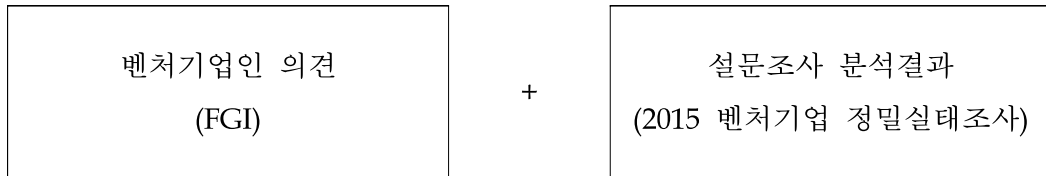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브랜드 보유여부	마케팅 방법	시장 점유율	매출구조	수입	수출	해외진출 애로사항

<마케팅단계 시사점>

- ☐ 충남 벤처기업의 브랜드 보유 개수는 수도권이나 기타시도보다 낮아 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자사 브랜드개발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자 매출(B2C)의 확대가 필요
- ☐ 충남 벤처기업은 주로 자체 유통망에 의한 직접영업의 비중이 높는데 홈쇼핑이나 인터넷 오픈마켓 등 전문 유통기관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 충남 농사랑 기능강화 필요
- ☐ 한·중 FTA로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교류, 중국시장조사, 민간교류 활성화하고,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무역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등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주력산업 위주지원 → 벤처기업 지원)
 - 특히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동남아시아나 중동으로의 진출도 활발한 만큼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중국, 일본 위주의 수출지원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시아나 중동을 위한 수출지원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아울러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인력 양성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전문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성숙기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브랜드 보유개수가 적고, 해외진출 비중이 낮은 것은 기업의 규모화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성장기의 벤처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 때 규모화를 위한 벤처집적지구의 선정과 벤처타운 및 R&D 융복합 센터의 건설이 필요

5. 충남 벤처기업 육성 방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



1)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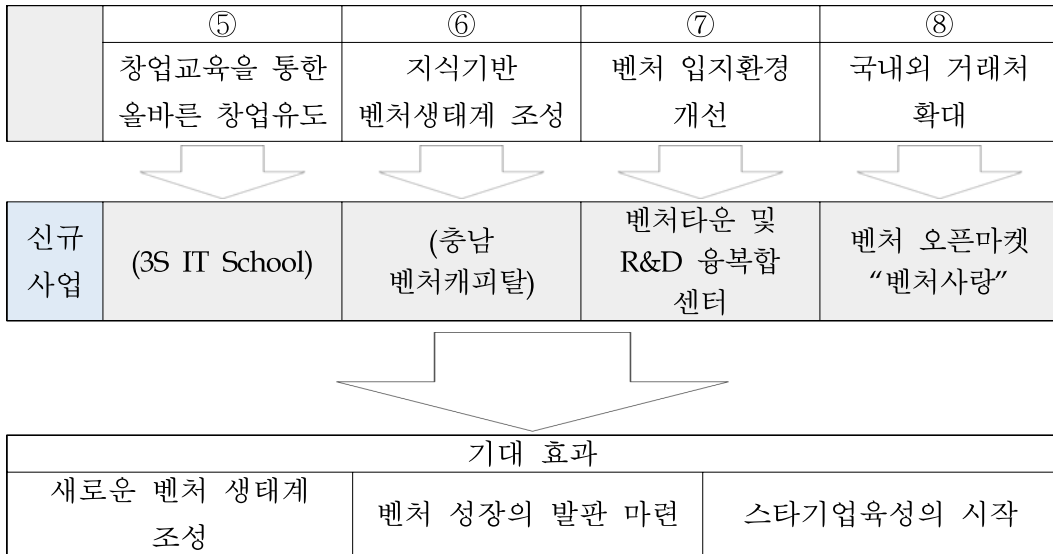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벤처기업인 의견 모두를 담을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의 성장을 견인할 강한(굳센) 허리 ! 창조벤처기업

2) 정책방향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과 8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상의 방향과 전략은 지속적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교육	투입	생산	판매
	①	②	③	④
4대 정책 방향	창업교육 선진화	도전을 위한 토대 마련	벤처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내실화 및 시장개척강화
	①	②	③	④
8대 전략	도전정신 및 사업화 동기 함양	도전을 위한 자금지원	기술 융복합화 및 역량강화	자사브랜드 개발



6. 요약 및 결론

(진단①) 충남은 아직까지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토대가 척박함

충남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최신의 벤처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는 일률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선진교육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선진교육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교육전문가 자문)을 통한 도입이 필요하다.

(진단②) 초기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시스템이 미약

다른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보다 풍부한 자금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엔젤매칭펀드 확대, 충남 벤처캐피탈 설립, 지역벤처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금융전문가 자문을 통한 충남 현실에 부합되는 자금지원 시스템의 신설 또는 확대 논의를 개진하고 투자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초기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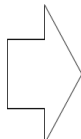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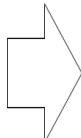
(진단③) 지역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 집적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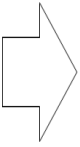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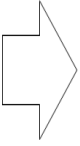
벤처기업이 모일 수 있는 집적지구 조성이 필요하다. 충남에 벤처타운 및 R&D 융복합 지구를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가 공존하는 충남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해외 및 경기도의 선진 벤처집적지구 방문 및 벤치마킹(설계 및 계획 전문가 자문)을 통한 도입이 필요하다.

(진단④) 벤처기업만을 위한 마케팅 시스템 미비

벤처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충남 농식품 판매를 이끌어온 “농사랑” 시스템을 벤처기업에 도입하여 “벤처사랑” 오픈마켓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에 벤처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사랑 벤치마킹은 오픈마켓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벤처사랑을 도입하며, 벤처 해외마케팅, 벤처 무역박람회, 벤처 시장개척단 등의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태조사 분석결과 요약>

	문제점		대응방안
벤처환경	신생 벤처 기업을 위한 토대 미흡		창업교육강화(도전정신 및 사업화 동기함양)
	제조업기반 중심		지식기반중심으로 구조변화 필요
투입	융자위주의 지원구조, 열악한 R&D 자금		충남 엔젤투자펀드의 확대와 충남 벤처캐피탈 설립
	제조업 기반 설비투자 중심		설비투자 중심에서 R&D투자 중심으로 생태계 유도
	스톡옵션활용 미흡		스톡옵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필요

생 산	부족한 CT(문화컨텐츠) 분야		IT, BT, ET 등 다양한 기술이 공존하는 지역이니 만큼 기술의 융합화 및 CT의 전략적 육성 필요
	산업재산권 및 해외규격 획득 미흡		민간 컨설팅 등의 전문가를 통해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 등을 대행하고 인증획득 비용에 대한 지원
	초보탈출 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		보육기관을 벗어난 벤처기업이 새로운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타운(지식산업센터)의 건설이 중요
	기술경계선상에 있는 한계 벤처기업이 많음 (특히 디자인, 품질경쟁력 취약)		벤처기업의 R&D를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R&D 융복합 센터의 조성이 필요
마 케 팅	낮은 브랜드 파워 (낮은 브랜드 개수)		자사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자 매출(B2C) 확대
	자체 유통망을 통한 직접영업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활용 → 충남 농사랑에 벤처창구 개설
	포괄적 수출지원 (벤처를 위한 별도의 지원없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무역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등 프로그램 개발 필요
	미국, 중국 위주의 수출지원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동남아시아나 중동으로의 수출지원도 필요
	부족한 수출전문 인력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내 벤처기업 전문 프로그램 개발
	규모화 실패 (자사브랜드 보유수가 적음) (해외진출 비중이 낮음)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집적지구 조성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국내·외 창업 및 벤처산업 지원정책	15
제2장 벤처기업 현황 및 문제점	34
1. 충남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벤처기업	34
2. 제조업 중심의 벤처기업	37
제3장 연구의 개요	40
1. 연구의 범위	40
2. 연구의 추진체계	40
3. 연구의 자료 및 방법	41
4. 연구의 주요내용	42
제4장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분석결과	45
1. 일반현황	45
2. 투입단계(재무 및 자금현황)	48
3. 생산단계(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52
4. 마케팅 단계(마케팅, 해외진출 현황)	61
제5장 충남 벤처기업 육성 방안	70
1. 비전	70
2. 정책방향	70
참고문헌	74

표 목 차

<표 1> 시도별 기업순위별 부가가치 비중	1
<표 2> 시도별 벤처기업수(2014.12월 기준)	34
<표 3>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2014년 기준)	35
<표 4> 산업별 벤처기업수(2014.12월 기준)	37
<표 5> 산업별 벤처기업 비중(2014.12월 기준)	38
<표 6> 내용적 범위	40
<표 7> 연구의 방법	42
<표 8> 연구의 주요내용	44
<표 9> 단계별 분석내용	45
<표 10> 시도별 벤처기업 수	46
<표 11> 성장단계	46
<표 12> 제조업 비중	47
<표 13> 기업의 위치	47
<표 14> 투입단계 조사분야	48
<표 15> 벤처기업의 지분구조	48
<표 16> 정부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 여부	49
<표 17> 종류별 정부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 여부	49
<표 18> 정부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 금액	50
<표 19> 2014년 신규자금 조달 규모	50
<표 20>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50
<표 21> 투자처별 투자액	51
<표 22> 스톡옵션 활용여부	51
<표 23> 스톡옵션 미활용 여부	52
<표 24> 생산단계 조사분야	53

<표 25> 주력제품과 관련이 있는 주요 기술	53
<표 26> 산업재산권 등록보유 건수	54
<표 27> 해외특허나 국제규격 획득여부	55
<표 28>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단계	55
<표 29> 제품 및 서비스 구조	56
<표 30>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할 때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	57
<표 31> 국내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할 때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	58
<표 32>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현황	59
<표 33> 벤처기업의 경쟁력 수준	60
<표 34> 마케팅단계 조사분야	61
<표 35> 자사브랜드 또는 공동브랜드 보유 여부	62
<표 36> 자사브랜드 또는 공동브랜드 보유 개수	62
<표 37> 영업 및 마케팅 방식	63
<표 38> 시장점유율	63
<표 39> 매출구조	64
<표 40> 원자재나 부품 수입여부	64
<표 41> 원자재나 부품 수입국가	65
<표 42> 수출형태	65
<표 43> 해외진출 여부	66
<표 44> 해외진출 지역	66
<표 45> 직간접 수출지역	67
<표 46> 해외시장 진출과정의 애로사항	68
<표 47>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72



그림 목 차



[그림 1] 바람직한 벤처기업 육성 방향	36
[그림 2] 연구의 목적	39
[그림 3] 연구관련 기관	41
[그림 4] 벨류체인(value chain) 기념	43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충남은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위주로 성장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소득의 역외유출, 분공장 논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지역의 1위 기업의 2010년 총 부가가치는 7.6조로 충남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5위 기업까지가 충남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시도별 기업순위별 부가가치 비중

(단위: %)

	1위 기업	5위 기업까지	10위 기업까지	20위 기업까지
충남	15.0	40.7	56.6	63.8
서울	6.6	13.8	19.0	26.7
부산	8.0	21.3	27.5	33.2
대구	2.3	7.6	11.9	18.7
인천	8.3	16.8	20.2	25.1
광주	26.3	55.5	65.4	70.4
대전	5.0	19.6	33.1	48.7
울산	29.4	55.6	61.3	69.3
경기	13.3	30.6	37.4	41.1
강원	5.3	20.9	31.9	43.7
충북	11.3	20.5	26.8	34.9
전북	10.1	30.2	38.2	48.5
전남	22.3	56.8	67.4	78.2
경북	23.1	44.1	54.1	60.4
경남	7.3	26.1	36.1	43.6
제주	4.7	17.8	27.0	40.7

자료: 2010년 경제총조사 분석결과

이러한 부가가치의 범위를 10위까지 확장하면 제조업 부가가치의 5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충남 제조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제조업 구조상 상위 대기업이 수많은 하청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1위 기업의 몰락은 구조적으로 충남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충남의 허리를 거뜨히 지탱하고 지역의 혁신주체가 될 벤처기업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남 벤처기업 가치사슬 상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김홍기(2014),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김홍기(2014)는 충남의 벤처기업의 투자금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은 고용창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새로운 미래 산업의발굴은 물론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의 기술 및 지식, 기업가정신을 축적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지역 벤처기업은 2013년 9월 현재 971개로 전국대비 3.34%로 전국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남도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의 위상은 취약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차원의 벤처기업의 육성은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생태계의 조성이 중요하고 나아가 벤처 생태계로의 자금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유입되기 위한 벤처자금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 차원의 벤처투자금융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차원의 투자금융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지역엔젤매칭펀드 설립, 2) 충청남도 기반의 벤처캐피탈 설립, 3) 지역벤처투자조합 결성, 4)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5) 적극적인 대기업의 참여 유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벤처기업 자금 분야에 국한된 연구로써 벤처기업 경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2) 임형빈(2014),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충남연구원

임형빈(2014)은 위험을 수반하는 벤처기업은 대기업보다 위험이 큰 신산업분야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기대하는 수익창출형 기업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벤처기업으로 최근 다양한 ICT 관련, 모바일 관련 기업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벤처기업육성의 중요한 요소는 모험자본의 축적, 규모의 경제를 위한 일정규모 성장한 벤처기업의 M&A시장의 활성화 등이 있다. 최근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벤처기업의 투자 촉진 및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 벤처기업의 투자액과 투자자 수는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충남의 벤처기업 현황은 전국의 3.3%인 970개 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 중 천안시가 450개(46.4%), 아산시 233개(24.0%), 금산군 61개(6.3%),논산시 52개(5.4%)의 순으로 나타난다. 충남의 경우 벤처기업의 전국적 비중은 높지 않으나 업체당 수출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는 기존 수출중심형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이 많이 입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 벤처기업의 특징과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활용하여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요 정책으로 민간·공공의 공동벤처펀드 운용,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소셜벤처 육성, 지역 내 기업지원 기관들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존 대기업 중심의 다변화하지 못한 지역의 산업구조 리스크를 보완하고 지역에 토

착화된 기업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언급하여, 충남의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3) 이윤준(2011),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STEPI

이윤준(2011)은 기술기반 벤처기업이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별편차 및 수도권 집중이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벤처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벤처기업은 지역의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등의 측면에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의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특허출원 중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높고, 대학으로부터의 신기술 이전 대상 중 벤처기업의 비중이 높다. 벤처기업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 및 수도권 집중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과제로 중앙정부는 지역별 산업분야의 특화에서 다양성 추구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사업 추진 및 선정 시 중복성보다는 지역의 혁신역량 및 산업기반과의 연관성에 보다 치중하는 방향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유망 벤처산업군 중심의 부품소재 기업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광역시 경우 태양전지, LED, 방송통신 융합 분야 부품소재 기업 육성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또한 지역차원의 대기업-벤처기업 상생협력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업과 함께 벤처기업 설립 등의 지원을 위한 ‘(가칭)상생금융’ 추진 등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측면에서 지역대학 차원의 창업 활성화 필요하며,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신설 및 대학발 창업자금 지원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윤준(2011)의 연구는 전국 단위의 분석으로 인해 지역단위 벤처기업의 특성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4) 권오혁, 신동호(2000),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접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혁, 신동호(2000)는 본 연구를 통해 1997년의 경제 위기로 이후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변화 요구에 따라 고급 기술에 기초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도의 실현 이후 지방 정부가 처한 경제적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정책들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 육성은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벤처기업 지원대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정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벤처기업 육성을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네트워크 구축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핵심전략이 취약하고,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연관된 산업정책 간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문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전체를 끌어갈 이론적 토대와 핵심전략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벤처기업의 성장토대로서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전략이 미흡하다. 벤처기업의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기업들이 긴밀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고기술 생산체제를 지원하는 토대로서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개별기업 차원의 지원 정책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시책들은 개별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별기업 지원 위주의 접근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정책의 통합성 부족이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다른 약점은 여타 관련 산업정책들과 잘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산업고도화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정책단위로 접근하고 있

는데,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성장하는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데 있어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업에서 중앙정부의 비중이 너무 큰 데 대해 중앙정부 부처간 정책적 조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벤처기업 육성시책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은 적절한 연계성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다양한 법과 시책들을 만드는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각 부처의 역할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벤처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및 생산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으로써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기술적, 물류적, 인적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고기술 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로서 효율적인 생산네트워크의 착근(embeddedness)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술 고도화를 위한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창업에 있어 초기 투자비용(sunk cost)을 줄여 주고, 고기술 기업의 양산을 통해 일반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들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처기업 육성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적 수준에서 벤처기업과 관련 산업들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는 생산네트워크(전문화 된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단지 벤처기업만을 위한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지방적 산업전문화를 통한 벤처기업 성장의 토대구축 전략이 될 것이다. 둘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중앙 정부의 포괄적 지원사업, 핵심 생산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지방자치단체(혹은 지방대학) 주도의 지방 생산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이원화되어야 하며, 지방 생산네트워크 조성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셋째, 지원시책의 통합적 접근으로서, 정부부문의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 금융, 조세, 보

조금 지원시책이 종합적,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지원시책들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을 채택하여야 한다. 예컨대,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도시 내 벤처기업 진흥지구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업체들에 공공 자금지원을 집중하여야 하는 재정지원 방식보다는 임대료 지원이나, 사무실 혹은 토지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여러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적절한 시기와 장소의 선택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생산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사태 이후 경제적 구조 조정이 긴요해진 현 시점은 고기술 체제로의 도약 및 공공부문에 의한 토지 매입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5) 김진근, 최원옥(2008), “경남의 벤처기업현황과 정책과제”, 경남발전연구원

김진근, 최원옥(2008)은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효과와 현재의 문제점을 경남지역에 집중하여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벤처기업은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혁신의 주된 동력과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차원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어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혁신을 달성하고 지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희망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이제껏 지역의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조사·정책대안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경남 지역에서 본격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연구가 전무한 것은 물론,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적 지원전략이 없는 상황으로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경남지역 벤처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비교분석, 2) 경남지역의 벤처육성 정책 및 제도를 검토, 3) 경남지역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외부자원 활용(정책수요)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책수요를 파악, 4)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영역별·성장단계별 정책방향 및 중점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의 중점 정책 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벤처펀드'결성 → '(가칭)경남창업투자'의 설립 추진이다. 정책의 시행배경은 경남지역 벤처기업들은 성장의 전 단계에 걸쳐 자금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가 제공하고 있는 자금으로는 '경남벤처펀드' 2호가 있으나 운용규모가 54억 원으로 자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1단계로 경남 벤처산업협회가 주도하여 지역 중견기업과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벤처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결성하여 창업투자사에 위탁 운용한다. 펀드의 투자대상은 미래전망이 밝은 기술·산업분야의 경남벤처기업으로 한다. 2단계로는 펀드가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2~3년 뒤 경상남도(경남테크노파크)가 주도하여 지역 중견기업과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 그리고 지역연고 금융기관(경남은행·농협경남본부)가 설립자본금을 분담하여 '(가칭)경남창업투자'를 설립함으로써 투자 펀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 투자자는 물론 지역소재 대기업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경남지역 기업과 경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도록 한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벤처기업 신용보증 실시이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1,047억원 규모이고 보증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과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정 한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경남지역 벤처기업들의 자금 활용도 1위를 기록한 정책자금의 공급을 증대시키기위해서도 경남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대상에 벤처기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의 '우선적 보증 대상'에 벤처기업을 포함시키고 단기적으로는 벤처기업으로서 지원대상이 되는 기

업의 신용보증 신청을 유도한다.

3. 테크노파크의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배점 부여이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및 R&D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 분야가 아닌 기업의 경우 자금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전략산업 분야와 동일하게 자금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우호적인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이 자금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준에 있어 우대배점을 적용하고, 비(非)전략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들의 벤처기업 인증을 유도함으로써 정책자금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테크노파크 내 '벤처정보'제공 전담팀 운영이다. 벤처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의 하나가 기술 및 경영관련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의 경남 벤처기업 사례분석에서도 '경영정보 획득(11위)'·'동종업계로 부터의 기술정보 획득(12위)'·'교수·동문을 통한 기술정보 획득(14위)'이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경남에서는 지역내 벤처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 경영 및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해 줄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남 테크노파크 내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M&A·기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차선택으로 외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혹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5. 도립대학-벤처기업 간 인력공급·기술협력 협정 체결이다. 경남지역 벤처기업들은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한 인력을 영입하고 교수의 추천으로 인재를 영입하며, 지역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남지역 벤처기업과 지역대학의 상생협력을 위한 '인력공급·기술협력'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대학 교수, 특히 도립대학 교수의 벤처기업 참여를 위한 휴직(현행 3년)기간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도 가능하도록 한다.

6. 우수 벤처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이다. 경남지역 벤처기업 사례분석에서는 ‘안정적인 납품관계 형성’이 성장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판매를 제고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⁵⁷⁾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발주 시 지역내 우수 벤처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벤처기업의 업종과 제품의 형태(부품·반제품·완제품)에 맞추어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7. 경남 벤처산업협회 활성화 지원이다. 현재 경남벤처산업협회가 결성되어 있으나 기업들의 참여(80여개 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지역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협회의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협회의 운영자금을 일부 지원한다. 업종별·성장단계별 우수 벤처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시상을 확대하고, 수상기업과 수상자에 대한 ‘가시적’인 특혜(정책자금 지원 우대·각종 부담금 면제 및 세제지원·해외시찰 동반 등)를 제공한다.

8. 경상남도 내 벤처기업 육성정책 전담자 운용이다. 경상남도의 경제정책 관련 담당부서는 산업중심으로 편제되어 벤처기업 지원업무가 여러 부서로 산재⁵⁹⁾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벤처산업 육성정책을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을 경제국 소속의 6급 직원이 전담하도록 한다.

9. 첨단 벤처기업 지원조례 제정이다. 경상남도의 벤처기업에 관련되는 조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의 정책의지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지역의 혁신·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등 지역의 번영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의지를 널리 밝히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도 지역 벤처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책지원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도 벤처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6) 임윤철, 정재용, 양현모 (2005), “새로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벤처)정책 발굴연구 -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과 벤처기업활성화 관점에서”,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정책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으로 IMF이후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펼쳐 2001년 벤처기업 수가 1만개를 넘어서는 등의 양적인 성장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IT 붐과, 코스닥 시장의 주가하락, 각종 게이트 사건에 의한 반 벤처정서 확산, 투자의 선순환 시스템 부재 등으로 벤처산업은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한 단기적 대안은 물론,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혁신주체로서 벤처기업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존 벤처정책은 질적 내실화의 실패, 기술혁신 및 사업화에 대한 형식적 지원, 단일 요소에 집중화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외형적 규모성장과 함께 산업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지원, 성장단계별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정책과 최근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된 ‘지역혁신체제(RIS)’ 및 ‘국가혁신체제(NIS)’와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한 새로운 벤처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혁신시스템과 벤처기업의 역할은 국가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 산업혁신체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 검토 및 실제 조성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벤처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벤처정책 수립의 방향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역동적 기업이론(Dynamic Firm Capability, DFC)에 근거하여 특정기업의 process(학습 패턴, 통합 능력의 정도), path(기술적 경로성, 기술전유성의 정도), position(기술, 재무, 제도, 조직자산의 정도) 상의 특성 및 이들과 기업 기술역량 획득, 경쟁력 확보의 성공 및 실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한 새로운 벤처정책 방향은 기존의 벤처정책에 대한 당면과제 도출, 해외 주요국의 벤처기업 육성 정

책 사례, 역동적 기업이론에 근거한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 사례 분석 등을 종합하여 벤처 기업의 질적인 성장이 가능한 토양 조성 과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국가의 전 부문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은 지역, 산업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될 수 있어 하위 시스템으로 지역혁신시스템과 산업혁신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산업혁신시스템은 특정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별 산업별 혁신시스템이고 지역혁신시스템은 국가혁신시스템을 지역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특히, 혁신시스템과 벤처기업과의 연계측면에서 혁신주체로서의 벤처기업은 Lundvall(1993)은 국가혁신체제의 혁신주체로서 기업조직,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개발 조직 및 교육훈련기관을 강조하였고, 이 공래(1999)는 기업, 공공연구기관, 정부, 대학, 금융기관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연계조직을 혁신주체로 설명하였다. 기업은 생산, 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실현하는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범세계적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클러스터의 경우, 각 국가별로 상이한 산업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독특한 특징을 가진 클러스터들이 조성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클러스터에서 첨단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혁신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대학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서 출발하여 현재 IT분야 제1의 클러스터로 성장하였고, 초기의 벤처기업들이 현재 규모가 큰 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벤처기업의 문화를 유지하거나 벤처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상의 혁신시스템에서 벤처기업의 위상 및 역할은 첨단산업분야에서의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과 유연한 조직구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기술혁신에 매우 적합한 기업조직으로 혁신시스템의 조성 과 유기적인 작동에 핵심적인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벤처기업은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난 균형적 산업발전, 벤처캐피탈 등의 금융시장 발전, 고용 창출 등의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시 높은 혁신성과 경영성과, 지역/업종 분포의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핵심적인 혁신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벤처정책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 간의 상호 연계성이 고려된 정책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된 해외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성공요건은 충분한 자금지원, 우수한 인력, 정부의 세제 및 투자유인 정책, 산학연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 창업을 촉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기업가 정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성공요인이 실제 벤처기업의 육성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한데 이는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 충족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산업 및 시장, 벤처산업의 주요 구성 요소, 중장기 산업정책의 방향, 정책 수요자의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수단 활용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실리콘밸리, RTP(이상 미국), 시스타(스웨덴), 울루(핀란드), 중관촌(중국), 실리콘와디(이스라엘), 신죽과학공업단지(대만), 방갈로(인도) 등의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성공한 클러스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혁신시스템과 연계한 벤처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7) 임형규 (2015), “창조적 미래를 위한 투자, 벤처 육성 정책 - 글로벌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의 최근 창업·스타트업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벤처기업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 8월 벤처기업의 수는 29,196개사로 창업 붐으로 일컬어지던 지난 2001년에 비해서도 약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창업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애플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의 출시로 인해 모바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카카오톡 티켓몬스터, 선데이토즈, 록앤롤, 배달의 기수 등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하고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면서 스타트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ICT 벤처붐의 1세대 주역들이 엔젤 투자와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벤처 투자사 및 엑셀러레이터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질적으로도 우수한 창업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창조경제 슬로건과 함께 창업 활성화 대책이 우리나라의 건전한 ICT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수행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13년부터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 사업은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 엑셀러레이터와 해외 우수 창업지원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보유한 창업지원 기법 등을 국내로 이전하고 공동사업 운영을 통해 해외 기업 및 투자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3년에는 벤처스퀘어, FT엑셀러레이터-서울, 글로벌창업네트워크 컨소시엄 등 국내 엑셀러레이터 3개 기관을 선발하였는데, 각각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인큐베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 패션전문 엑셀러레이터인 FT엑셀러레이터(미국, 밀라노), 알토스비즈니스그룹 등과의 협력을 통해 28개 스타트업의 글로벌 서비스 출시, 현지법인 설립, 국내외 투자유치, 해외사업 제휴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공동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11.5억원(3건)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와, 2건의 해외법인 등록, 해외투자 유치 3건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특히 루이슈즈(신발전문 클라우드소싱), JJS미디어(팬중심 콘서트 기획서비스) 등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글로벌 서비스 개시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갖추가고 있다.

스타트업의 양적성장과 생태계의 활성화의 이면에 우리에게 위협적인 이웃이 존재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바로 ICT 분야에서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가 그것이다. 중국은 ICT 인프라의 확충과 중산층의 소득증가 등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여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ICT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45.8%(13년)으로 이용자가 6억 2천만명에 달하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중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도 글로벌시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며 우

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실리콘밸리’로 인식하는 우리에게 있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촌의 성장은 존재자체로 위협적이다. 중국 최대의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 PC분야 세계 1위의 레노버, 세계 최대규모의 온라인 게임업체로 성장한 텐센트, 중국판 애플로 불리우는 샤오미 등이 모두 중관촌에서 창업하여 성장하였다. 또한 약 200여개의 외국기업과 포춘 500대 기업중 200개사가 R&D센터와 지사를 중관촌에서 운영하고 있다. 벤처 생태계의 핵심인 인재도 중관촌에 밀집되어 있다. 베이징대, 칭화대 등 대학 41개와 국가급 과학연구소 200여개가 소재하고 있어 우수인재와 첨단기술의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해외에서 귀국한 유학생 2만 명이 중관촌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창업을 시도하여 이미 누적 6천여개사가 중관촌을 중심으로 창업되었다고 한다. 또한 마윈(알리바바), 레이쥔(샤오미), 찡리핑(텐센트) 등의 성장한 IT기업의 대표들이 엔젤투자자로 활동하면서 벤처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어, 신생벤처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다. 이러한 글로벌 벤처 생태계에서 중국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유능한 창업인재의 유입을 적극 촉진하여 이중 아이디어간의 결합을 통한 혁신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 외 창업 및 벤처산업 지원정책

1) 국내 벤처 지원정책

한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교수·연구원의 창업장려 지원, 정책자금·신용보증 우대,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M&A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13. 5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창업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용

자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변경과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및 재투자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3. 6월 '[창조경제실현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하였다. 창조경제실현계획으로 대구, 대전, 전북, 경북, 광주, 충북, 부산, 경기 등 전국 8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하였으며,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5월경 개소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기술이나 상품으로 만드는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선도적 모험자본, 연기금 및 민간금융회사의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3. 10월 벤처중소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어 시행중이다.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7년에 들어와 중앙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을 경제활력 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벤처기업 육성을 주요 산업시책으로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거하여 중앙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광역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서울특별시는 벤처산업을 서울형 산업으로 규정하고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탈공업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취약해지고 있는 서울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이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릴 수 있는 서울형 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에서이다.

서울형 산업이란 서울의 특성에 맞고 서울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규정

된다. 서울형 산업은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고 고급 인력 집약적이며 공간 절약적이어서 토지 의존도가 낮고 공해유발이 작고 소규모 산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책에 부합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부가가치와 고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애니메이션기업,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적인 서울형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벤처기업은 인간의 창의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 정보, 기술집약형의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정보와 연구전문인력이 집적된 서울을 떠나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서울형 기업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의 고지가, 고임대료 등 고비용구조를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을 조성함으로서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서울경제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 정보, 기술 집약형 산업체제로 전환하여 동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산업 및 기술혁신의 지렛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벤처기업 육성의 주요 전략으로 벤처기업 발굴과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의 집단화는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동일 단지 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편의시설들을 입주시키고 동시에 은행, 우체국, 창업투자회사 등 지원시설을 배치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는 1995년 6월에 강서구 등촌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였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서초구에 서울영상벤처센터를 설립하여 3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를 강남구 개포동에 대지 4,685평, 건물 30,000평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이 센터는 전체 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17,400평에 서울형 기업, 성공한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을 함께 입주시켜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공동시설의 활동 등을 영위하고, 8,000평에는 창업보육센터, 컨벤션센터 및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예비기업에 대한 신기술개발 및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대학 및 연구소 등 외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를 입주기업에 제공할 계획이었다. 서울시가 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 역점을 두어온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1999년 5월 중구 예장동에 건립되었다. 이 센터는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단지화를 유도하기 위해 테크노마트빌딩 등 기존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해 벤처기업의 집적을 도모해 왔다. 그런데 이 센터나 집적시설들은 서울 벤처기업의 중심타운인 강남구의 테헤란밸리나 여의도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지역구 수준의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지원의 특징은 한번 방문으로 기업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벤처기업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금융, 입지,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다. 부산시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운영자금 융자지원, 특별 신용보증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창업자금 융자지원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억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이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5%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방식이다. 특히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은 담보 없이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에 의해서 융자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창업 후 업력 5년 미만 벤처기업으로 하여 2억원 이내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융자조건은 연 7.5%로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이다.

특별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성 평가에서 우수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기술신용 보증기금과 부산 신용보증조합을 통하여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시는 각종 유관 기관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각종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소개, 알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민간 엔젤 캐피탈 등에 유망 벤처기업을 알선 소개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왔다.

부산시의 대표적인 벤처기업 입지지원 시책은 사무실 무상 제공제도이다. 이 제도를 위해 마련된 건물은 김해공항, 남해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근처에 위치한다. 입주대상 기업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의 벤처기업이다. 입주기간은 3년

미만이며 작업실 규모는 업체당 30평 정도가 제공된다. 입주업체는 관리비만 부담하고 사무실을 업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보육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라, 영도, 경성대학교 등에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보육실을 조성하였다. 모라 소프트웨어 단지의 경우사상구 모라동 아파트형 공장 내에 위치한다. 2000년 6월 현재까지 약 80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보육실들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입주기간은 최대 2년이고 보육실의 규모는 업체당 17평 정도이다. 입주대상 업체는 예비 S/W 창업자나, 창업 후 2년 이내인 S/W업체로서 입주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이고, 관리비 월1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이 창업보육실은 사업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기술정보,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는 영도지역에도 정보통신부와 협력해서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보육센터를 확보하고 벤처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영도구 남항동에 위치한 건물 내 조성되어 있는 이 보육센터는 최대 입주기간이 2년이고, 업체당 15평 정도를 대여한다. 입주 대상 기업은 예비 소프트웨어 창업자나, 업력 2년 이내의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보증금 100만원에 관리비로 월 10만원 정도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 보육센터에서는 사업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기술정보, 금융,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이 12개 정도, 정보통신부가 5개, 산업자원부가 신기술창업지원단 산하에 4개, 그리고 별도의 벤처빌딩 2개 등의 생산공간을 조성하여 약 400개의 기술 기반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부산시의 의욕적인 노력은 여타의 광역자치단체들에 대해 상당히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산발적인 벤처기업 유치 방식은 벤처기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 형성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는 또한 오래 전부터 지사과학단지를 지정하여 첨단과학단지를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최근까지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종전에 군용 비행장으로 사용되던 수영만 일대 30만평 규모의 토지에 정보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추진 해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97년의 경제위기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고, 이에 부산시는 최근

“센텀시티” 계획을 수립하여 5만평 규모의 소프트웨어 중심 벤처기업 집단화 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컨벤션 센타, Information Data Center, 엔터테인먼트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업체들의 충분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벤처기업들을 위한 기술 및 경영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서 기술, 세제, 금융 등을 3년간 지도, 조언하는 벤처기업 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연 기술지원체도를 도입하여 16억원 규모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벤처기업 기술개발과제를 최우선 선정하여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등과 지역협력센터(RRC)를 조성해서 자동차 분야, 항만시스템 분야, 해양산업 분야 등의 벤처기업을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타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 기술가치 및 사업성공 가능성을 평가해 주고 있다.

인천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으로써 중앙정부 및 각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 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벤처기업 지원시책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서 특히 자금지원, 입지지원,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인천시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시설개체자금 500억원의 용자 대상업체로 벤처기업들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용자 신청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벤처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공장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추진 방안은 ①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시설개체자금 500억원이 벤처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용자 대상업체로 명기하고 이들

기업은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②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부를 벤처자금화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인천 신용보증조합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자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조합은 시와 경제단체장, 지역 금융기관장, 지역 상공인 등이 공동 출연하였다. 인천시는 또한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 인천소재 대학교수, 기업체, 금융권,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엔젤클럽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및 경영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엔젤클럽의 구성인원은 약 10 - 15명 정도가 될 것이며 1998 하반기 중에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지원을 공정히 하기 위해 기술력평가센터와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벤처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증과 기술평가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금지원 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평가내용은 보증지원 가능 금액 평가, 기술력 및 사업성평가 등이며, 평가결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국 기술진흥기금 자금대출시 우대지원, 기술개발시범기업 소요자금 전액지원 및 벤처캐피탈(창투사, 엔젤클럽) 투자대상기업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평가대상은 금융지원을 받고자하는 인천시 소재 벤처기업 및 정보통신업체들로서, 평가인력 및 운용은 기술신용 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연간 2회에 걸쳐 시행된다.

인천시의 벤처기업 입지지원 사업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당초 인천시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송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인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 등을 계획하였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신도시(미디어밸리) 제2공구에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이 단지의 면적은 S/W파크 20만평 중 2만평 규모로서, 유치시설은 벤처기업 이외에도 벤처캐피탈회사, 연구소, 컨설팅회사, 창업보육센터 등 벤처기업 지원시설 등이었다. 또 인천시는 송도 테크노파크를 미디어 밸리의 핵심부인 제2 공구에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사업기간은 1997년 - 2002년이며, 예상 사업비는 2,312억원

(현금1,768억원, 현물 544억원)으로 계획되었다. 고도 기술지원 창업보육(TBI),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 창업의 활성화,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사업주관사 격인 미디어밸리주식회사가 미디어밸리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지지부진한 상태에 처했으며, 이에 인천시는 송도매립지에 여타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젝트는 인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설립이다. 이 센터는 정보통신산업, 특히 S/W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산업용품 유통센터 내 418평에 15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고가의 공동 이용장비와 정보 지원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사업비는 총 20억원 규모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지역 고유의 산업정보 D/B를 개발하여 기업체 현황, 기술 및 인력장비 현황, 특허 및 학술정보 등을 수록,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천시와 산업기술 정보원이 지역 및 전국의 산업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산업기술 정보망 및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왔다. 약 3억원의 예산으로 기업관리시스템과 산업용품 유통센터의 Web시스템과 중소기업 지원자금시스템, 그리고 산업용품 유통센터 정보화사업을 지원해 왔다.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시는 벤처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타운 조성 등 입지지원과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그리고 벤처닥터제와 같은 행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희생의 원동력이 될 벤처기업을 육성키 위한 대덕벤처-테크노밸리 조성계획(TVTV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창업지원제도로서 벤처닥터제를 운영해 왔다. 벤처닥터제는 창업 및 기술경영상의 애로 타개를 위해, 법률, 세무, 마케팅, 창업 및 특허, 노무 등 5개 분야에 변호사, 회계사, 교수, 변리사, 노무사 등 8명의 전문가를 벤처기업 자문위원, 즉 벤처닥터로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된 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벤처닥터제는 비상근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 형태로 의뢰업체에서 부담한다. 이용실적을 보면 98년 설립 후 2000년 5월까지 총 882건이

접수 및 상담되었다. 그 가운데 창업 치 특허 분야가 가장 많아서 350건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회계분야 329건, 법률분야 109건의 순이었고, 이용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외에도 대전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도 상담을 하고 있는 바, 2000년 5월까지 총 1114건의 상담을 기록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제품판로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아서 417건의 상담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금지원에 관한 것이 300건, 벤처에 관한 것이 133건, 창업에 관한 것이 103건 등으로 나타났다(대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2000). 또한 대전시의 창업스쿨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예비창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실시되고 있다. 강사진은 변리사, 회계사, 벤처닥터, 전문교수, 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적인 내용의 과목을 강의한다. 1999년에는 3회에 걸쳐 5일간, 혹은 2일간의 창업스쿨이 진행되었는데, 총 507명이 수료하였다. 1차 수료생 가운데 실제로 8명이 직접 회사를 창업하였으며 대전시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교육이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5월 3일간의 창업스쿨이 1회 추진되었는데, 총 890명이 수료하였다. 2000년에는 6월 이후 3회에 걸쳐 총 27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창업스쿨은 법률, 특허, 코스닥 등록절차, 모범 사례, 연구원, 혹은 교수 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벤처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왔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저리 대출을 제도화하여 2~5%의 이자차액을 시가 부담하며, 기술력은 있으나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경쟁력평가센터」 KAIST 내에 설립하고, 「대덕엔젤마트」와 「대덕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대출위주로 지원하는 자금지원방식을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나아가 대전시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인증제와 과학포럼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는 1999년 8월부터 지역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평

가단과 공동으로 20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쟁력 평가센터(COTAC)를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다. 기술경쟁력 평가센터는 12개 기술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서 발급, 기술경쟁력 인증(CT, Competitive Technology) 마크 발급, 기술거래 기준가 등 투자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토록하는 제도이다.

한편 기술신용기금도 자체 운영하고 있는 기술평가센터의 수와 평가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증가하는 기술평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1999년 4월 대전 시민의 과학생활화 도모, 고급 과학기술 인력간의 정보 교류의 장 조성 및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개발 등을 위해 행정기관장 5명, 연구소 연구원 76명, 대학교수 60명 등으로 구성된 대덕과학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안정된 입지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창업초기단계에는 시, 대학, 연구소 등 창업보육기관간 협의체를 도모하고, 정보제공과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업의 붐 조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창업보육실을 졸업하여 사업화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Post-TBI를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가 1998년 Post-TBI로 도시형 제조업종의 「벤처타운 다산관」을 완공하였고, 2000년 10월까지 신탄진 제3, 4공단 내 1,500여평 규모의 「벤처타운 장영실관」을 건립하여 벤처기업에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2000년 6월까지 약 40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벤처기업들의 호응이 저조한 실정이고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에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에니메이션 분야의 특화를 위해서 EXPO과학공원의 관리동 청사에 「벤처타운 종합영상관」을 마련하여 1998년 하반기부터 영상산업과 관련된 업체를 입주시키고 있는데, 2000년 6월까지 10여개 업체가 활동중이다. 또한,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서 연구단지 및 과학산업단지내에 대규모 벤처기업 협동화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나, 첨단과학산업단지는 1992년 부지만 지정해 놓고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기초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지방자치시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겹치면서 기초자치단체들도 활발한 산업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기초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현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전략은 창업지원센터 설립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몇몇 구청은 저렴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각종 사무기기들을 지원하는 간이형 창업보육센터 방식의 벤처기업 창업지원 체도를 도입되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 1996년 벤처기업 지원센터를 창립하였고, 1998년 7월에는 중랑구청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였다. 또 1998년 8월에는 송파구청이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후 금천구청, 강서구청, 양천구청, 성북구청 등 서울시내 10 여개의 구청도 창업보육센터를 구청내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관악구는 서울대와 연계하여 관악벤처센터로 명명된 벤처산업빌딩을 확보하여 서울대생과 서울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들에게 싼 임대료에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특징은 저렴한 임대료로서, 강동구 벤처기업 지원센터의 경우 1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평당 1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 사무실에 대해 1/3의 가격이다. 중랑구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업체당 7-10평 규모의 창업보육실을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평당 4-6천원, 관리비 평당 월 4천원에 공급하였다. 중랑구는 구 상봉 1동 동사무소를 보수하여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극히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였다.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은 임대료 이외에도 각종 사무용 기기와 근거리 통신망(LAN), 기타 서비스가 포함된다. 송파구청의 창업보육센터는 쾌적한 기술개발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근거리 통신망과 광케이블을 설치하였으며, 강동구청의 창업보육센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었다. 중랑구청은 창업지원

센터내에 중소기업 정보교류실을 설치하고 PC, 복사기, FAX, 도서 등 행정지원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입주업체들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세금, 각종 자료 입수 등을 창업보육센터 직원이 대행해 주고 있다. 특히 송파구청과 중랑구청은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입주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정례적으로 전문가 초빙 경영지도 교육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를 소개하는 벤처기업 설명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입주지원 자격은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창업 희망업체나 창업 후 1년 이내 업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입주업체에 대한 업종 제한은 첨단 분야 업체와 의료기 분야 등 첨단벤처기업을 위주로 하고 강동구청의 창업보육센터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는 관내 기업들이 입주 우선권을 가진다. 하지만 입주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여타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가지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고 그 내용도 빈약하다. 수도권의 경우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용인시 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안양시와 고양시가 벤처기업지원 시책을 준비 중에 있었고, 안산시는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테크노파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여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안양시는 시장의 선거공약에 벤처기업 육성이 포함됨으로써 벤처집적시설 건립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벤처기업 관련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 벤처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에도 신임시장의 선거공약에 벤처기업 육성이 포함되면서 벤처집적시설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관내 반월공단 내에 테크노파크를 설치하여 벤처기업들을 유치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방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들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내역은 매우 미미하다. 조사대상이 되었던 청주시, 포항시, 울산시, 구미시, 광양시, 창원시, 춘천시, 천안시, 마산시, 전주시 중에서 전주시와 춘천시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들은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수적인 정책적 협조 정도에 그쳤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주 영상 소프트웨어 특성화단지 건립이다. 전주시는 원래 20만평 규모의 첨단 영상산업단지를 전주시 근교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현실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최근 사업을 수정하였다. 전주시는 기존의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 안기부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영상 소프트웨어 특성화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 건물은 3,400평의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의 내부를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증축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첨단산업 유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바, 특히 멀티미디어 영상산업과 애니메이션산업, 그리고 생물산업을 주요 육성부문으로 삼고 있다. 이 산업들을 유치, 육성하는 작업은 춘천시 시정의 핵심과제로 되어 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개의 계를 특별히 설치하였고 '소양강의 기적을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춘천하이테크벤처타운을 건립하였다. 춘천시 후평동에 준공된 연건평 3,000평 규모의 멀티미디어기술 지원센터와, 같은 규모의 생물산업 혁신지원센터는 총 47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 등 지방비가 30% 가량이다. 이 건물들은 1998년 3월에 착공되어 1999년에 준공되었으며 벤처기업 보육실과 함께 각종 지원시설들이 입주하였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이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춘천시는 춘천시 서면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에 있다. 주요 시설은 만화 이미징 정보센터로 서, 이 건물 주변을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춘천시가 시행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은 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등 비어 있는 공공 청사를 활용하거나 공단 내 폐건물들을 사들여 벤처기업에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건물들은 보증금 없이 대략 평당 4천 원(실가격의 50% 수준)에 임대되고 있어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1998년 말 35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입주 희망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 전주시와 마산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를 채택하고 있고, 포항시, 천안시는 벤처기업의 공장설립 신청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2) 국외 벤처지원정책

가. 미국

미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자생적인 지역혁신시스템(RIS)의 구축과 연계한 벤처 기업의 생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리콘밸리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제도의 탄생 배경이 되었는데, 실리콘 벨리 내에는 주요 구성주체인 벤처기업·대학 및 연구소·벤처캐피탈·전문서비스 회사(법률자문·컨설팅회사) 등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미국의 주요정책 현황은 첫째, 금융 및 신용보증지원 정책 부문에서는 1982년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금융은 대부분 폐지하고 신용보증을 확대 하였다¹⁾. 이러한 신용보증 프로그램의 용자자금 용도는 부동산구입·건물의 개축·임차건물의 확장·비품 및 기계장치 등의 취득하는 것과 재고품 구입·운전자금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둘째, 미국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설립한 벤처기업 지원 기관인 57개의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통해 약 1,000여개의 서비스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산학연관 공동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SBDC의 운영자금은 미국 중소기업청에서 50% 정도 제공하고 나머지는 주정부·민간·대학교에서 충당하고 있다. 셋째,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연방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혁신지원프로그램으로써 NASA·국방성 등 11개의 정부 부처 및 기관이 후원하고 있고, 자금확보·계약·파트너십과 SBIR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SB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은 중소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에 대

1) 미국은 신용보증기관이 별도로 없고 은행이 대출받을 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대출은행에 보증함.

한 연구개발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공동연구 및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는 지원규모가 큰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있다.

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국내시장의 한계로 인해 창업초기부터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에서 자본을 조달받는 것과 IPO(기업공개)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결과로 2000년 기준 미국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이스라엘기업은 118개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외국인 투자 및 해외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혜택·보조금 지급·보증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벤처캐피탈·인큐베이터의 적절한 자금지원 및 벤처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주요정책 현황은 첫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27개소에 분산 설치된 기술창업보육센터(TIC)는 신기술·유망 아이디어 창업을 제품개발과 연결시키는데 있으며, 운영 주체는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주요 대학과 투자자본을 보유한 벤처캐피탈이 구성되어 있다. 둘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은 대부분 첨단기술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통신·화학·의료기기 분야에 기술개발자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1985년 설립된 민간 벤처캐피탈 '아테나'가 빈약한 펀드 규모로 어려워지자 1993년 1억 달러를 투자하여 YOZMA라는 공공 벤처캐피탈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민간 벤처캐피탈 펀드 확대에 자금운영이 원활해지자 1997년 민영화 하였다. 넷째, 미국과 첨단 벤처산업의 협력촉진을 위한 "산업연구개발재단(BIRD-F)"을 합동으로 설립하고 캐나다(CIIRDF)·싱가포르(SII-RD)와도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 핀란드

핀란드는 경제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창업단

계에서 벤처캐피탈 시장 형성을 위해 다양한 공적투자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핀란드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특징은 1980년대 중반 산업별 정책보다는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된 울루 테크노 폴리스가 조성되었다. 특히 울루 테크노폴리스 중심으로 주요 대기업인 노키아와 벤처 기업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공존을 도모하며,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의 주요정책 현황은 첫째, 핀란드기술개발센터(VTT)는 정부주도의 국책 연구기관으로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 결과로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IT산업분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주로 기술개발청·핀란드 학술원·국가연구개발기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셋째, 1993년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를 신(新)국가전략으로 설정하여 대학·연구소·대기업·중소기업이 밀집한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주도의 정책은 과학기술 및 클러스터를 중시하는 핀란드 정책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라. 대만

대만 벤처기업 육성정책 특징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벤치마킹하여 정부 주도적인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민간주도로 운영되면서 자율적인 혁신 시스템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신죽 과학공업단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집약적이고 첨단기술지향적인 발전모델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주요정책 현황은 첫째, 1991년부터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은 기업이 25%이상, 국가과학 위원회에서 75%이내를 부담하여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둘째, 대만 최대의 국책연구소인 공업기술원(ITRI)의 개방실험실(Open-lab Program)은 1996년부터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공동개발 부문과 창업보육센터 부문으

로 구분되어있다. 이의 주요기능은 첨단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육성·해외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며, 개방실험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실험실·사무실·숙박·제반입주여건제공·법률·경영·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신중국과학공업단지 운영시스템 경우 엄격한 입주심사를 통해 첨단기술개발 능력과 인력·설비 등을 제공하고 세금감면과 재정지원정책을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마. 중국

중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특징은 정부주도의 벤처집적단지 조성·창업보육센터 설립·벤처투자자금 조성 등의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정책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 지역혁신 클러스터인 ‘중관촌’의 초창기 벤처기업들은 중국과학원·북경대학·청화대학에서 직접 창업한 기업들이며, 연구소와 연구기관에서 파생된 벤처기업의 유형이 특징이다.

중국의 주요정책 현황은 첫째, 인재유인을 위해 중관촌 첨단기술업체의 전문기술인력과 관리인력을 북경시민으로 대우하고 관련기관의 심사를 거쳐 호적을 부여하며, 국가소유 순자산액의 일부분에서 일정한 비율로 주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대학 인근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벤처창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기을 운영하기도 한다. 셋째, 기술개발자금은 ‘과기형 중소기업기술혁신자금 집행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북경 첨단기술단지 내 첨단기술업체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과 S/W의 개발 및 생산·첨단기술개발·선진기술도입 등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바. 인도

인도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특징은 인도는 IT산업에서 세계시장점유율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해 있으며, 실리콘밸리 전체 기술인력의 40%를 공급하고 세이캄5(SEI-CAMM5 : IT분야 최고 기술보유기업에 부여하는 기술등급)를

받은 50개 기업 가운데 29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내수시장의 한계로 수출지향적인 벤처정책 지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IT산업의 발전의 중심지인 방갈로 지역은 우수대학과 연구기관의 밀집·영어 및 컴퓨터에 능통한 인재·저렴한 인건비 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인도의 주요정책 현황은 첫째, 소프트웨어 파크(Software Technology Park : STP)의 설립은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과 핵심적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 및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며, 2004년 기준으로 인도 전역에 39개가 설립되어 있다. 둘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무관세 및 IT서비스를 포함한 S/W수출로 인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3) 충남 벤처지원정책

가. 창업 지원

충남은 신기술창업보육센터를 통해 '99년부터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4년에 1,600백만 원 (국비 712, 도비 500, 기타 388)을 지원하였으며, '14년 3분기, 18개 센터에 보육실 601개, 입주기업 360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년CEO 500 프로젝트를 통해 500개의 청년창업을 목표로 창업교육, 창업활동비 및 창업공간 등 지원하고 있으며, '14년 도비 1,00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4. 1월에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개소하여, 4년간 120개 청년창업을 목표로 창업교육 및 창업공간 등 지원하고 있으며, '14년 3,650백만 원(국비 3,500, 도비 150) 지원 실적을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지원 정책은 '14. 9월 현재 37개 기업(경제진흥원 24, 충남TP 13) 입주, 창업공간 등 지원하였으며, '14년 국비 275백만 원(경제진흥원 145, TP 130) 지원하였다.

나. 자금 지원

자금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벤처투자조합정책을 통해 '00년부터 총 6개의 벤처 투자조합을 운영하여 총 198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14. 9월말 현재 2개의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자금을 통해 업체당 23억원 (시설자금 20, 운전자금 3) 이내에서 융자 지원하였다.

다. 마케팅 및 R&D 지원

경영측면의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운영(년 1회) 및 중소·벤처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판로 지원을 실시하였으다. 또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통해 R&D 지원하고 있다. '14년 8,320백만 원 (국비 4,220, 도비 2,025, 기타 2,075)의 지원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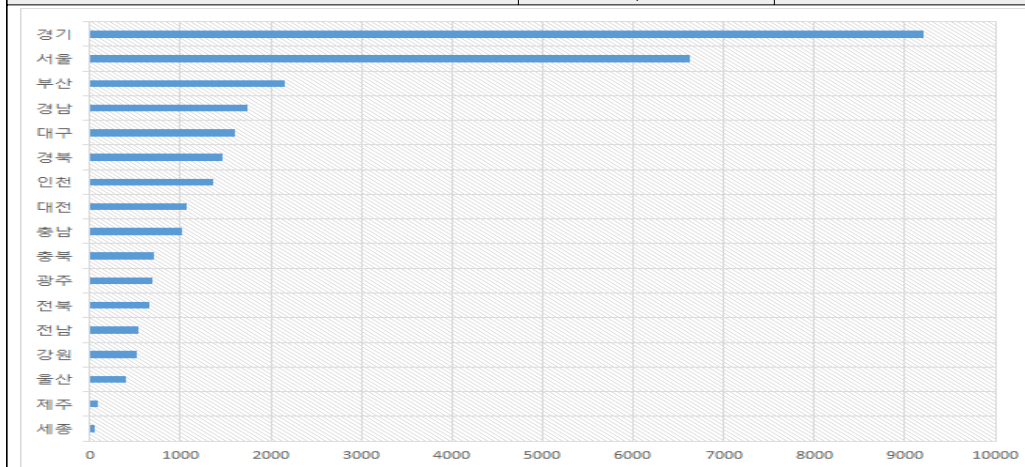
제2장 벤처기업 현황 및 문제점

1. 충남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벤처기업

〈표 2〉 시도별 벤처기업수(2014.12월 기준)

(단위: 개, %)

순위	시도	벤처기업수	비중
1	경기	9,206	30.78
2	서울	6,633	22.18
3	부산	2,150	7.19
4	경남	1,735	5.80
5	대구	1,596	5.34
6	경북	1,468	4.91
7	인천	1,370	4.58
8	대전	1,069	3.57
9	충남	1,020	3.41
10	충북	712	2.38
11	광주	686	2.29
12	전북	661	2.21
13	전남	536	1.79
14	강원	516	1.73
15	울산	400	1.34
16	제주	96	0.32
17	세종	56	0.19
계		29,91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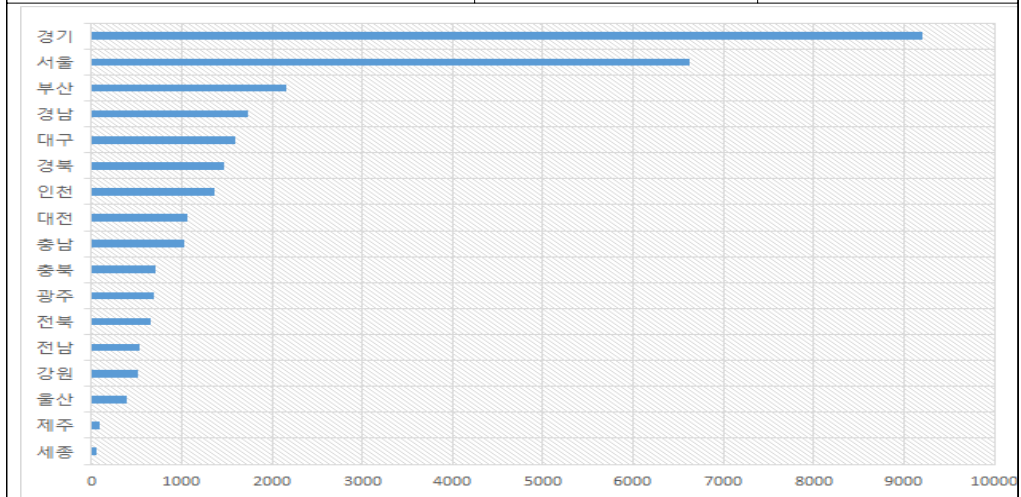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2014년 12월 현재 1,020개로 전국대비 3.41%로 전국 9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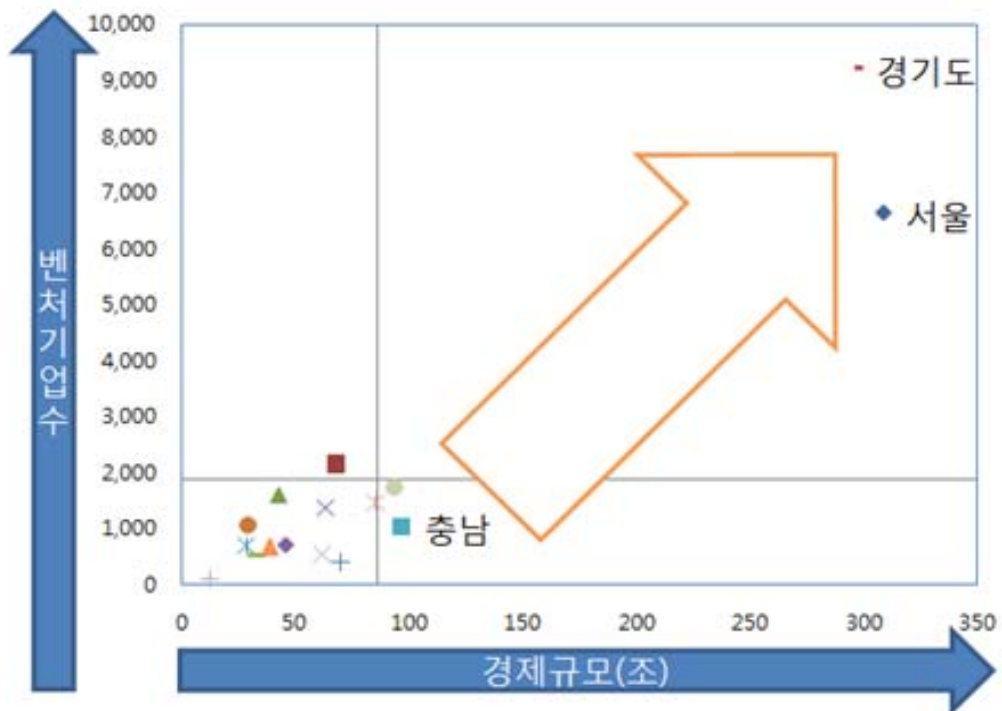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순위	시도	지역내 총생산	비중
1	서울	314,160,086	0.22
2	경기	313,909,218	0.22
3	충남	102,835,820	0.07
4	경남	93,794,853	0.07
5	경북	88,147,794	0.06
6	부산	70,619,386	0.05
7	울산	70,124,285	0.05
8	인천	65,543,263	0.05
9	전남	62,947,937	0.04
10	충북	47,962,310	0.03
11	대구	44,469,129	0.03
12	전북	40,030,385	0.03
13	강원	34,128,921	0.02
14	대전	30,336,271	0.02
15	광주	29,644,411	0.02
16	제주	13,269,538	0.01
계		1,422,002,860	1.00



이러한 수치는 지역총생산이 전국 3위이고 중소기업 종사자수가 전국 4위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하여 벤처기업의 지역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 평가된다.

(그림 1) 바람직한 벤처기업 육성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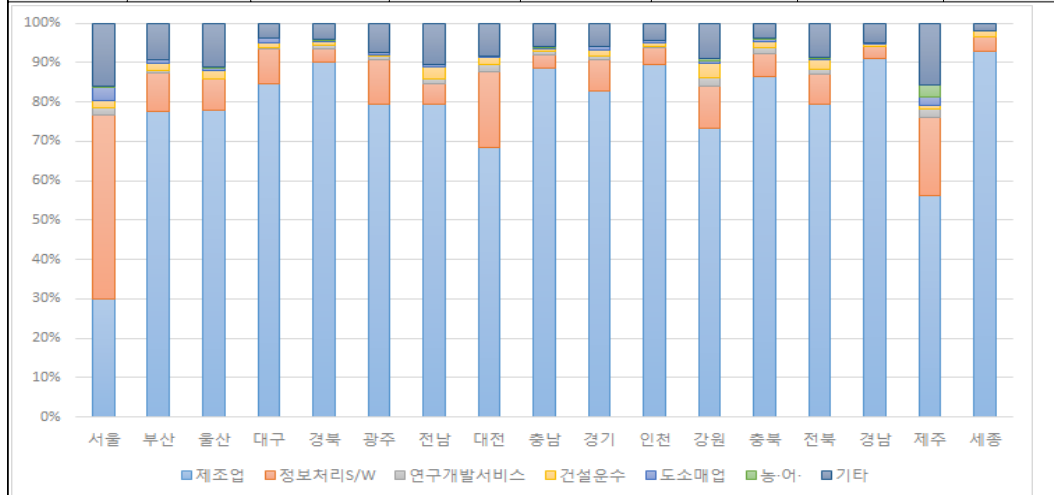
따라서 충남은 경제규모에 걸맞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2. 제조업 중심의 벤처기업

〈표 4〉 산업별 벤처기업수(2014.12월 기준)

(단위: 개)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 임광업	기타
서울	1,978	3,109	121	124	230	3	1,068
부산	1,670	206	13	39	20	2	200
울산	311	32	0	9	2	1	45
대구	1,351	140	6	18	22	1	58
경북	1,324	48	15	13	5	4	59
광주	545	77	6	3	4	0	51
전남	426	28	6	16	3	1	56
대전	731	206	21	18	4	1	88
충남	904	34	8	6	4	5	59
경기	7,609	750	88	118	86	16	539
인천	1,228	55	6	11	9	1	60
강원	378	55	12	19	2	3	47
충북	615	41	11	12	4	2	27
전북	526	50	8	15	2	3	57
경남	1,579	54	2	9	4	2	85
제주	54	19	2	1	2	3	15
세종	52	2	0	1	0	0	1
계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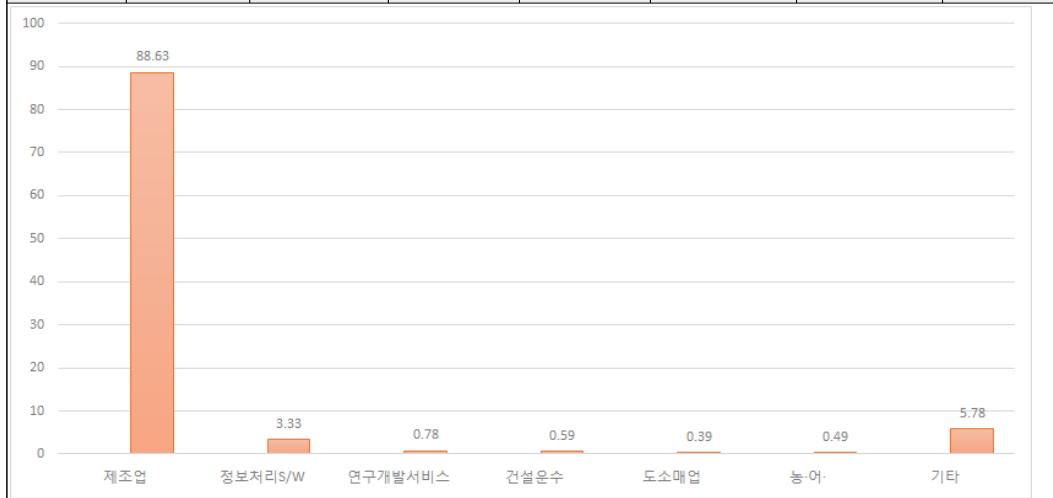


자료: 벤처기업협회 통계자료

〈표 5〉 산업별 벤처기업 비중(2014.12월 기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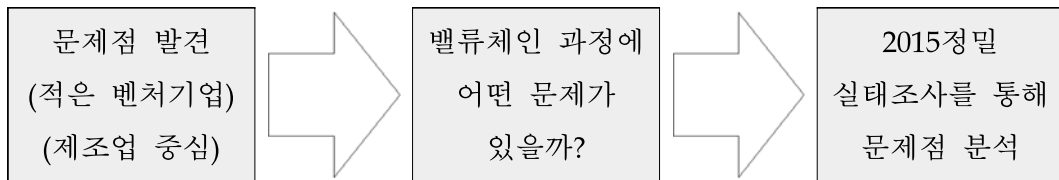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 임광업	기타
서울	29.82	46.87	1.82	1.87	3.47	0.05	16.10
부산	77.67	9.58	0.60	1.81	0.93	0.09	9.30
울산	77.75	8.00	0.00	2.25	0.50	0.25	11.25
대구	84.65	8.77	0.38	1.13	1.38	0.06	3.63
경북	90.19	3.27	1.02	0.89	0.34	0.27	4.02
광주	79.45	11.22	0.87	0.44	0.58	0.00	7.43
전남	79.48	5.22	1.12	2.99	0.56	0.19	10.45
대전	68.38	19.27	1.96	1.68	0.37	0.09	8.23
충남	88.63	3.33	0.78	0.59	0.39	0.49	5.78
경기	82.65	8.15	0.96	1.28	0.93	0.17	5.85
인천	89.64	4.01	0.44	0.80	0.66	0.07	4.38
강원	73.26	10.66	2.33	3.68	0.39	0.58	9.11
충북	86.38	5.76	1.54	1.69	0.56	0.28	3.79
전북	79.58	7.56	1.21	2.27	0.30	0.45	8.62
경남	91.01	3.11	0.12	0.52	0.23	0.12	4.90
제주	56.25	19.79	2.08	1.04	2.08	3.13	15.63
세종	92.86	3.57	0.00	1.79	0.00	0.00	1.79
계	71.15	16.40	1.09	1.44	1.35	0.16	8.41



자료: 벤처기업협회 통계자료

충남 제조업기반 벤처기업 비중은 88.63%로 세종(92.86%), 경남(91.01%), 경북(90.19%), 인천(89.64%) 다음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충남의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처리 S/W, 연구개발서비스 분야에서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충남 벤처기업의 생태계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연구의 목적



충남 벤처기업의 투입, 생산, 판매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 벤처기업경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업의 밸류체인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설문조사를 활용하는바 투입, 생산, 판매상의 문제점을 위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3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충청남도 지역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 2015년 시점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한 내용적 범위는 충청남도 벤처기업 밸류체인 상의 문제점 도출 및 이를 통한 올바른 육성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밸류체인을 투입, 생산, 마케팅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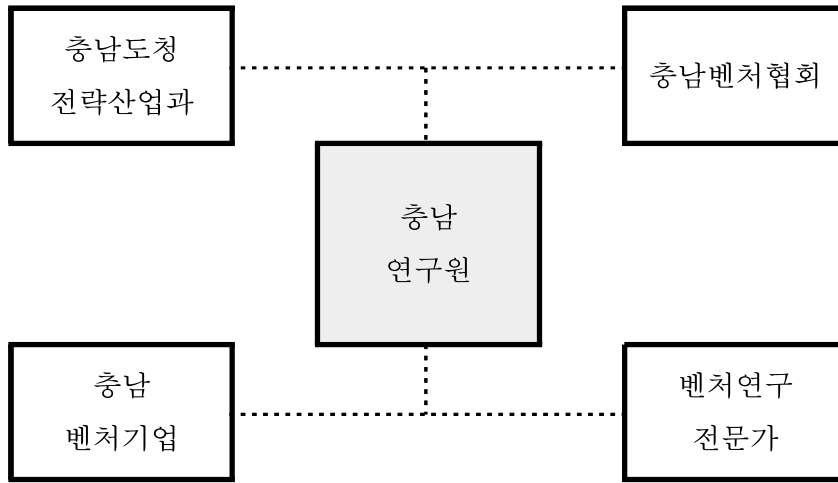
〈표 6〉 내용적 범위

기업의 밸류체인 과정		
①	②	③
투입	생산	마케팅

2. 연구의 추진체계

본 연구의 연구 추진체계 중 기초자료 및 충청남도 추진정책 현황은 충남도청 전략산업과 협조를 통해 확보하였다. 또한 충남벤처협회 및 벤처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충남벤처기업 FGI를 통해 올바른 벤처기업 육성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 연구관련 기관



3. 연구의 자료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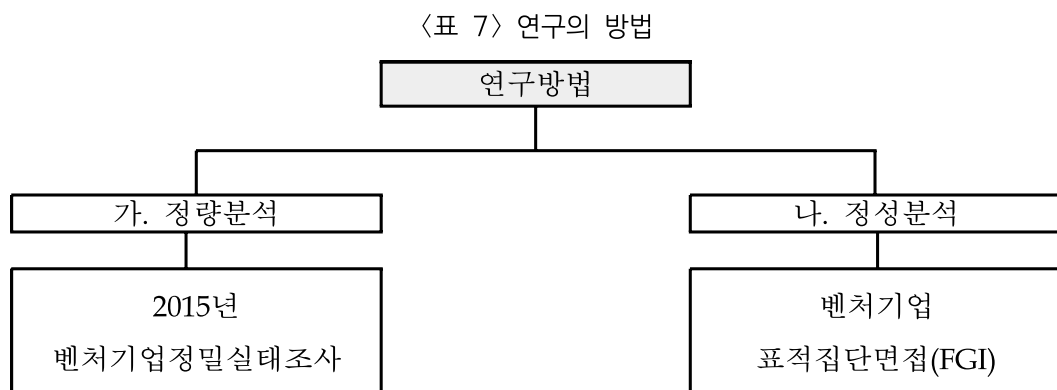
1) 연구의 자료

본 연구는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지역별로 층화추출된 표본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며, 지역의 벤처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및 일반현황, 벤처특성 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전반적 기초 현황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수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12월 말 현재 벤처 확인기업 29,844개 기업(예비 벤처기업 제외)을 조사 대상으로 표본조사 실시하였다. 조사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업종(8대 업종), 고용규모(5개 규모)로

비례할당을 실시하고, 표본추출 시 해당 셀(cell) 내에 사업체를 지역별로 정렬 후 계통추출을 통해 총 2,227개의 유효표본을 획득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벤처기업협회와 한국기업데이터이며, 조사기간: 2015년 7월 6일~9월 18일 기간에 실시하였다. 통계의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모집단의 값을 추정(신뢰도 95%, 표본오차 1.92%)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정확한 정책적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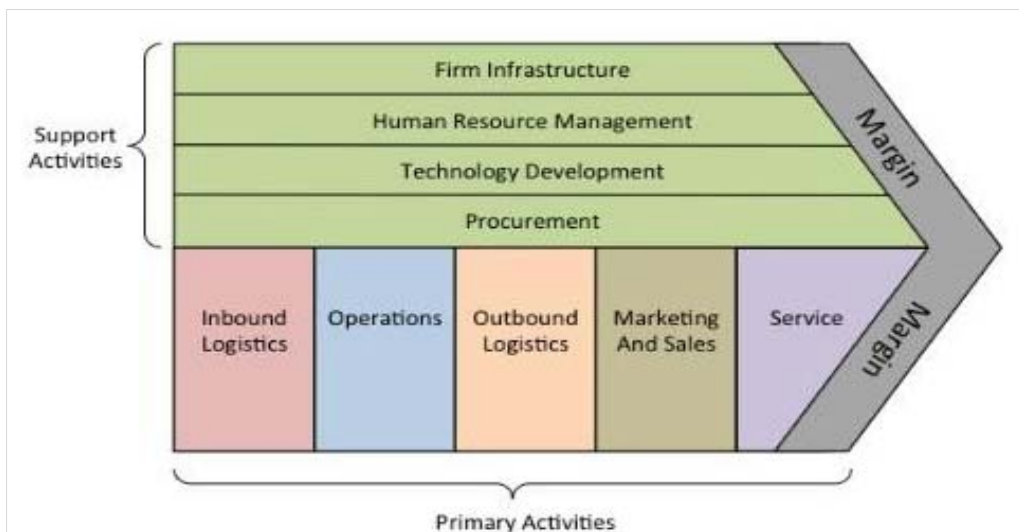
4. 연구의 주요내용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기업의 밸류체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밸류체인은 기업 활동에서 포괄적인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밸류체인은 198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모델로 정립한 이후 광범위하

게 활용되는 이론 틀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기능·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한다. 벨류체인에 대한 정의로 기업활동을 주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나누며, 주활동은 제품의 생산·운송·마케팅·판매·물류·서비스 등과 같은 현장업무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부문이며, 지원활동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부문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가치활동 각 단계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핵심활동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으며, 각 단계 및 핵심활동들의 강점이나 약점 및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각 활동단계별 원가동인을 분석하여 경쟁우위 구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 벨류체인(value chain) 개념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2)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우선 벤치기업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실시(지역, 산업특성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다음으로 벤처기업의 밸류체인 단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타시도와의 문제점을 비교함으로써 충남 벤처기업의 위상을 살펴보고 충남차원의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8〉 연구의 주요내용

시장 세분화	기업 일반현황		
기업의 밸류체인 (유통제 외)	투입	생산	마케팅
	재무 및 자금현황	기술 및 산업재산권현황	마케팅 및 해외진출현황
+			
정부의 지원제도	벤처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경영애로사항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가치사슬을 살펴보고 가치사슬단계별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벤처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대응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가치사슬상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충남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이 후 단계별 문제점을 제시하고 충남 벤처기업의 올바른 육성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충남벤처기업의 일반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투입단계, 생산단계, 마케팅 단계에서 충남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9〉 단계별 분석내용

투입	생산	마케팅
재무 및 자금현황	기술 및 산업재산권현황	마케팅 및 해외진출현황

1. 일반현황

충남은 창업 및 초기성장기 벤처기업 비중이 적어 초기단계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조업기반의 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 지식기반 벤처기업 양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 벤처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남 내 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집적지구 조성이 필요하다.

〈표 10〉 시도별 벤처기업 수

(단위: %)

시도	벤처기업수	비중
강원	476	1.60
경기	8,906	29.84
경남	1,792	6.00
경북	1,488	4.99
광주	744	2.49
대구	1,555	5.21
대전	1,305	4.37
부산	1,965	6.59
서울	6,580	22.05
세종	95	0.32
울산	453	1.52
인천	1,278	4.28
전남	637	2.14
전북	480	1.61
제주	58	0.20
충남	1,148	3.85
충북	884	2.96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충남의 벤처기업 수는 1,148개로 양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총생산 규모에 비해 벤처기업 수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 충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11〉 성장단계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창업기	1.26	5.48	5.95
초기성장기	24.09	27.25	27.24
고도성장기	43.24	45.3	43.11
성숙기	30.15	21.51	23.5
쇠퇴기	1.26	0.46	0.21

성장단계별로 살펴보았을 때, 충남 벤처기업은 창업기, 초기성장기의 비중이 적고, 성숙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창업 및 초기성장기 벤처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12〉 제조업 비중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자체제조	41.19	27.29	33.99
일부제조+아웃소싱	45.29	42.13	45.39
아웃소싱	7.63	9.84	9.34
비제조기업	5.88	20.75	11.28

한편, 충남은 수도권이나 기타시도보다 제조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지식기반 벤처기업 양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3〉 기업의 위치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벤처촉진지구	1.21	1.18	0.86
테크노파크	1.26	5.28	8.76
창업보육센터	5.01	4.82	9.58
벤처집적시설	0.00	2.42	1.61
협동화단지	1.27	0.87	1.05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0.00	1.04	0.69
아파트형 공장	0.56	14.29	2.91
국가 및 지방산단	25.81	17.13	29.6
기타 일반지역	64.88	52.98	44.92

기업 위치상 충남은 벤처집적시설,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이 수도권이나 기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충남 벤처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남 내 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집적지구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2. 투입단계(재무 및 자금현황)

본 절에서는 충남 엔젤투자펀드의 확대와 충남 벤처캐피탈 설립을 검토하고, 개인투자자와 벤처기업 간 매칭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충남의 재무 및 자금현황은 용자위주의 벤처기업 지원에서 R&D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R&D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의 구성이 타시도보다 늦은 만큼 충남엔젤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 및 지역 엔젤투자자의 적극적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설비투자 중심에서 R&D투자 중심으로 생태계 유도(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중심으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스톡옵션에 대한 활용도나 낮에 스톡옵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투입단계에서는 충남 벤처기업의 재무 및 자금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14〉 투입단계 조사분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분구조	정책지원 여부	정책지원 금액	신규자금 조달규모	자금조달 방법	R&D투 자규모	스톡옵션 활용

〈표 15〉 벤처기업의 지분구조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창업자	66.25	66.88	68.62
창업자가 아닌 대표이사	1.43	2.04	2.57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	11.34	7.87	7.21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지	3.67	3.25	3.62
일반 임직원	9.56	10.23	9.65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0.12	0.54	0.68
타기업	1.57	1.2	0.98
개인투자자	4.62	5.32	5.11
기타	1.43	2.66	1.55

충남 벤처기업은 수도권이나 기타시도에 비해 창업자 및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의 지분비율이 높고, 개인투자자,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낮아 창업자의 위험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 엔젤투자펀드의 확대와 충남 벤처캐피탈 설립을 검토하고, 개인투자자와 벤처기업 간 매칭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표 16〉 정부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 여부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있다	32.11	34.04	37.82
없다	67.89	65.96	62.18

한편, 충남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지원 여부도 수도권이나 기타시도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7〉 종류별 정부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 여부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R&D자금(출연금)	42.56	45.56	57.62
융자(정책자금)	33.31	23.66	25.62
보증서 지원(보증서발급 대출)	39.9	46.73	35.03

정책지원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지원 비중은 33.31%로 수도권 및 기타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R&D자금(출연금)의 경우 42.56%로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8〉 정부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 금액
(단위: 백만원)

	충남	수도권	기타
R&D자금(출연금)	192.1	207.5	416.3
융자(정책자금)	234.4	238.2	298.6
보증서 지원(보증서발급 대출)	227.8	190.6	281.4

충남은 R&D자금(출연금)의 평균금액 또한 1.92억 원으로 수도권과 기타시군에 비해 지금규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은 융자위주의 벤처기업 지원에서 R&D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R&D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표 19〉 2014년 신규자금 조달 규모
(단위: 백만원)

	충남	수도권	기타
신규자금 조달	337.4	479.3	511.3

충남 벤처기업의 2014년 신규자금 조달 규모는 3.37억으로 수도권의 4.79억, 기타시도의 5.11억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신규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IPO(기업 공개/상장)	0.0	0.0	0.0
캐피탈·엔젤투자	0.0	0.3	0.5
회사채발행	2.0	0.5	0.5
정부정책지원금	43.1	43.2	50.7
은행 등 일반금융	31.7	34.3	31.0
기타	23.1	21.7	17.3

벤처기업 대부분의 자금조달 방법이 정부정책지원금이나 일반금융 중심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캐피탈·엔젤투자의 비중은 0%로 나타났으나, 충남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으로 다소나마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엔젤펀드의 첫 기업 투자로 충남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인 S사가 1,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S사는 지난해 11월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충남엔젤펀드 투자를 신청하였으며 투자금액은 1억 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의 조성이 타시도보다 늦은 만큼 충남엔젤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 및 지역 엔젤투자자의 적극적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21〉 투자처별 투자액

(단위: 백만원)

	충남	수도권	기타
국내 설비투자액	150.8	87.1	112.2
국내 R&D투자액	170.7	249.4	188.5
해외투자액	0.6	3.2	6.2
기타	49.0	60.6	87.4

충남은 수도권 및 기타시도에 비해 R&D 투자액과 해외투자액이 낮고, 설비투자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의 경우 제조업 기반 벤처기업이 많기 때문에 설비투자액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설비투자 중심에서 R&D투자 중심으로 유도(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중심으로)할 필요가 있다.

〈표 22〉 스톡옵션 활용여부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과거 활용	0	2.44	1.47
현재 활용	0.97	3.15	1.67
미래 활용	4.17	13.02	8.36

스톡옵션의 정의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스톡옵션은 우수인력 유입, 핵심인력 이탈방지,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기업 경영성과 개선이 주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여부는 수도권이나 기타시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스톡옵션 미활용 여부

(단위: %)

구분	비중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25.23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	11.14
불합리한 회계·세무 처리	9.24
복잡한 제도 및 행정 절차	5.40
횡령이나 배임 등 법률적 문제 야기 소지 내재	2.86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이점이 없음	35.54
기타	10.59

충남이 스톡옵션을 미활용 하는 이유로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 이점이 없음이 3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이 25.23%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의 스톡옵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3. 생산단계(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충남은 IT, BT, ET 등 다양한 기술이 공존하는 지역이니 만큼 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CT분야는 전략적 육성 필요) 또한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록보유건수가 수도권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산업재산권이 취약할 경우 경쟁 벤처기업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해외규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없어 독자적으로 해외 규

격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대해 민간 컨설팅 등의 전문가를 통해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 등을 대행하고 인증획득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초기(영세)벤처기업이 많은 충남은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한데 보육기관을 벗어난 벤처기업이 새로운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타운의 건설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은 기술 경계선상에 있는 한계 벤처기업들이 많아 이들 기업을 국내 또는 세계 최고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충남의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한계기업이 많고 벤처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R&D를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구조성이나 R&D 융복합 센터의 조성이 필요(특히 디자인경쟁력, 품질 경쟁력에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표 24〉 생산단계 조사분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유기술 산업재산 권	해외특허 국제규격 획득여부	주력제품 개발단계	제품 및 서비스 구조	기술력 수준	연구개발 역량	제품 경쟁력

〈표 25〉 주력제품과 관련이 있는 주요 기술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IT(정보통신기술)	12.19	34.4	25.59
BT(바이오 기술)	14.39	6.45	10.09
NT(나노기술)	3.67	2.75	3.76
ET(환경기술)	19.69	13.40	11.90
CT(문화컨텐츠기술)	1.25	2.74	1.34
ST(우주항공기술)	2.57	0.44	0.51
기타	46.25	39.83	46.81

충남 벤처기업 주력제품(서비스)과 관련성이 가장 큰 기술은 ET(환경기술)로 나타났고, BT(바이오기술), IT(정보통신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기타 시도 벤처기업이 IT(정보통신기술)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충남은 IT(정보통신기술), BT(바이오기술), ET(환경기술)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충남은 IT, BT, ET 등 다양한 기술이 공존하는 지역이니 만큼 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거 충남의 4대 전략산업이었던 CT분야가 수도권이나 기타시도에 비해 취약한데 충남은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이 풍부한 만큼 CT분야를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성이 있다.

〈표 26〉 산업재산권 등록보유 건수

(단위: 건)

		충남	수도권	기타
보유건수	특허권	4.17	4.18	4.25
	실용신안권	0.53	0.68	0.64
	디자인권	0.81	0.97	0.97
	상표권	0.73	1.22	0.92
	해외산업재산권	0.21	0.43	0.28
출원절차 진행건수	특허권	0.74	0.93	1.09
	실용신안권	0.03	0.04	0.04
	디자인권	0.10	0.07	0.13
	상표권	0.19	0.10	0.13
	해외산업재산권	0.28	0.16	0.12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특허권은 평균 4.17개를 보유하고 있고,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각각 평균적으로 0.81건, 0.73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충남 벤처기업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해외산업권 보유에서 모두 수도권이나 기타시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록보유건수가 수도권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재산권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산업재산권이 취약할 경우 경쟁 벤처기업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표 27〉 해외특허나 국제규격 획득여부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해외특허	9.05	5.81	4.13
해외유명규격	0.00	1.30	0.59
국제규격	50.65	43.02	47.06
없음	40.3	49.87	48.22

충남의 경우 해외특허나 국제규격을 획득한 벤처기업의 비중은 수도권이나 기타시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해외유명규격인 UL(미국), JIS(일본) 등을 획득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벤처기업에 대해 해외 유명규격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해외규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전문인력이 없어 독자적으로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대해 민간 컨설팅 등의 전문가를 통해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 등을 대행하고 인증 획득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단계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초기개발단계	1.28	3.26	1.04
시제품 개발단계	3.06	4.53	3.56
제품화 또는 상용화 실현단계 (매출 미발생)	11.31	12.87	12.01
초기 시장진출단계 (1~2년 매출 발생)	21.38	30.36	27.28
시장확대단계 (3년이상 매출 발생)	62.97	48.98	56.11

충남 벤처기업의 주력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확대단계가 62.97%로 비중이 가장 높았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초기개발단계와 시제품 개발단계, 제품화 또는 상용화 실현단계, 초기 시장진출단계의 비중은 수도권이나 타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제품개발이나 제품화 또는 상용화에 대한 자금지원과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표 29〉 제품 및 서비스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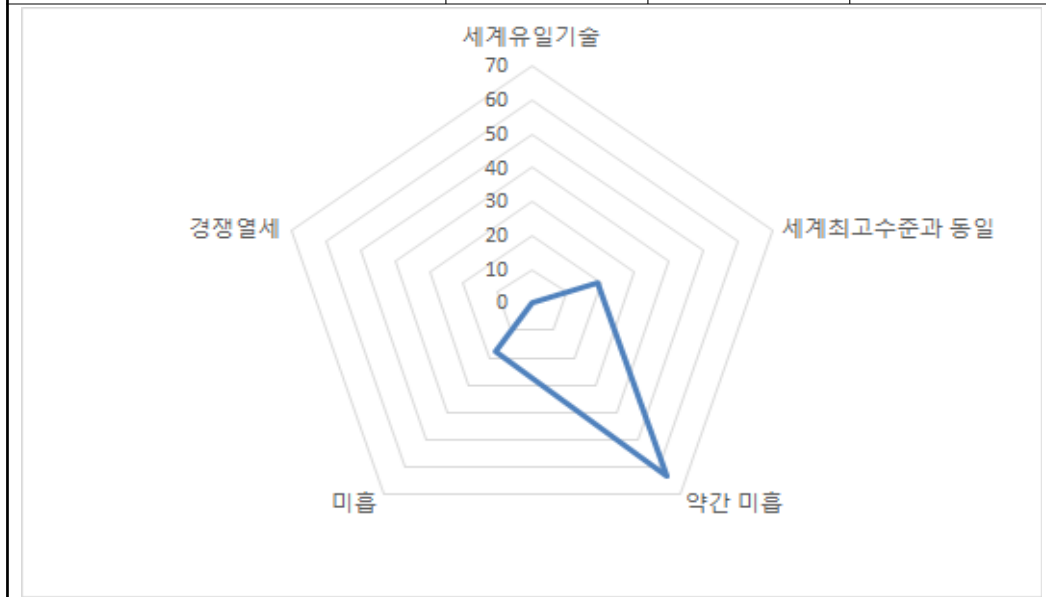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하나의 대표 제품 또는 서비스에만 집중	27.93	21.57	25.4
두 세 개 정도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주력	47.11	55.87	52.14
4개 이상 복수의 제품 및 서비스 다각화 추구	24.96	22.56	22.46

충남 벤처기업들은 수도권이나 기타시도에 비해 하나의 대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집중하거나 4개 이상 복수의 제품 및 서비스 다각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남 벤처기업이 양극화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영세)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기관이나 시설을 벗어난 벤처기업이 새로운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타운의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0〉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할 때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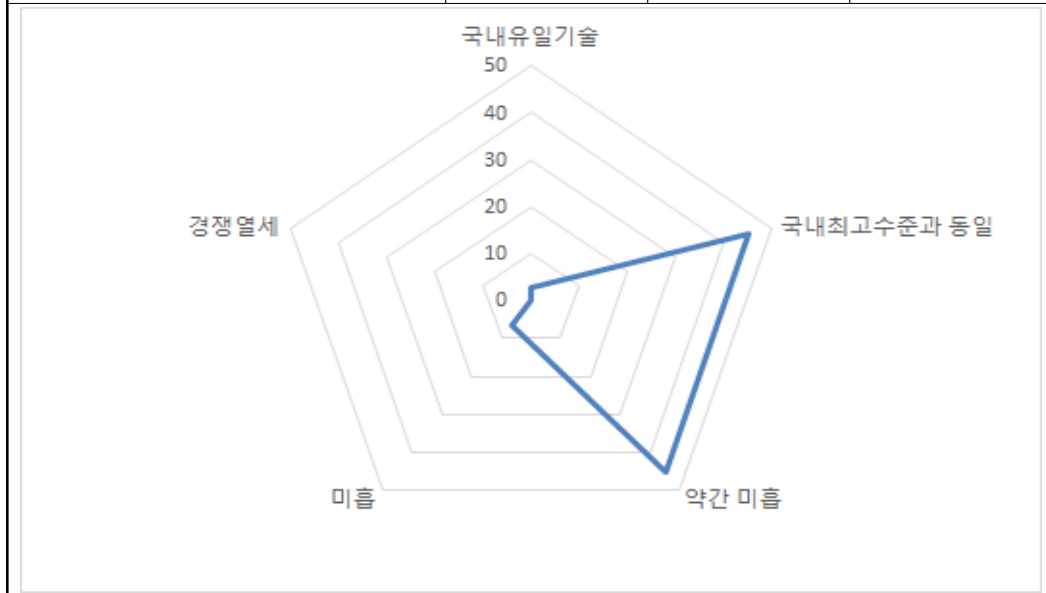
	충남	수도권	기타
세계유일기술	0.00	2.79	2.31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	18.88	17.2	18.12
약간 미흡	63.54	47.07	52.21
미흡	17.58	23.57	21.26
경쟁열세	0.00	9.37	6.09



세계 최고수준의 벤처기업과 비교할 때 약간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6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남이 이들 한계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충남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느냐, 경쟁에서 도태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국내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할 때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국내유일기술	2.79	8.36	8.58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	45.46	42.34	41.89
약간 미흡	45.35	35.43	36.99
미흡	6.41	10.75	10.70
경쟁열세	0.00	3.11	1.84



국내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할 때도 충남 벤처기업은 약간 미흡하다고 응답한 한계기업이 4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글로벌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의 기술력 차이도 시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 한계 벤처기업들을 어떻게 국내 또는 세계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가 성공적인 지원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남 벤처기업에게는 올바른 기술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한계기업을 국내동일기술 수준으로 육성하고, 세계한계기업을 세계동일기술 수준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2〉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현황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49.16	59.05	54.18
부설연구소는 없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보유	17.79	13.56	13.99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없지만, 연구개발 인력보유	13.35	13.56	16.33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 없음	19.70	13.83	15.50

연구개발의 핵심 시설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비중도 49.16%로 수도권(59.05%)이나 기타시도(54.1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이 없는 기업의 비중도 19.70%로 수도권이나 기타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충남의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한계기업이 많고 벤처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도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충남의 벤처기업의 R&D를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구조성이나 R&D 융복합 센터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 벤처기업의 경쟁력 수준

(단위: 5점 척도)

	충남	수도권	기타
기술 경쟁력	3.64	3.65	3.60
가격 경쟁력	3.50	3.37	3.36
디자인 경쟁력	3.24	3.34	3.23
품질 경쟁력	3.57	3.70	3.63
조직관리 경쟁력	3.09	3.22	3.13
마케팅 경쟁력	3.08	3.11	3.06



충남은 수도권 벤처기업과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만 유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으로 가격경쟁력이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디자인경쟁력,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융복합 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고 마케팅관련 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케팅 단계(마케팅, 해외진출 현황)

충남 벤처기업의 브랜드 보유 개수는 수도권이나 기타 시도보다 낮아 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사브랜드개발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자 매출(B2C)의 확대가 필요하다. 충남 벤처기업은 주로 자체 유통망에 의한 직접영업의 비중이 높는데 홈쇼핑이나 인터넷 오픈마켓 등 전문 유통기관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충남 농사랑 기능강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로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교류, 중국시장조사, 민간교류 활성화하고,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무역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등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즉, 주력산업 위주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동남아시아나 중동으로의 진출도 활발한 만큼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중국, 일본 위주의 수출지원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시아나 중동을 위한 수출지원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인력 양성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전문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성숙기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브랜드 보유개수가 적고, 해외진출 비중이 낮은 것은 기업의 규모화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기의 벤처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 때 규모화를 위한 벤처집적지구의 선정과 벤처타운의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마케팅단계 조사분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브랜드 보유여부	마케팅 방법	시장 점유율	매출구조	수입	수출	해외진출 애로사항

〈표 35〉 자사브랜드 또는 공동브랜드 보유 여부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자사브랜드 있다	43.85	42.78	38.91
자사브랜드 없다	56.15	57.22	61.09
공동브랜드 있다	3.80	3.29	2.42
공동브랜드 없다	96.20	96.71	97.58

자사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충남 벤처기업은 43.85%로 수도권이나 기타시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충남 벤처기업 또한 3.80%로 수도권이나 기타시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사 브랜드의 경우 개별적 시장판매가 가능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표 36〉 자사브랜드 또는 공동브랜드 보유 개수

(단위: 개)

	충남	수도권	기타
자사브랜드	1.73	2.17	2.16
공동브랜드	1.00	2.49	1.72

그러나 자사브랜드의 평균 보유개수는 수도권이나 기타시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충남 벤처기업의 자사브랜드 보유비중이 수도권이나 타시도 보다 다소 높다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편이고, 브랜드 보유 개수는 수도권이나 기타시도보다 낮아 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표 37〉 영업 및 마케팅 방식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자체 유통망에 의한 직접영업	76.21	60.94	69.41
대리점이나 전문 유통기관을 통한 위탁영업	0.00	4.37	4.19
직접영업과 위탁영업 병행	23.79	34.69	26.40

충남 벤처기업의 마케팅 방식은 주로 자체 유통망에 의한 직접영업 비중이 76.21%로 수도권이나 기타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위탁영업의 비중은 낮았다. 자체 유통망에 의한 직접영업의 경우 경기나 사건사고에 의해 크게 매출이 좌우되기 때문에 위탁영업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충남 벤처기업은 주로 자체 유통망에 의한 직접영업의 비중이 높는데 홈쇼핑이나 인터넷포털 등 전문 유통기관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38〉 시장점유율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국내시장	11.80	13.65	10.83
해외시장	1.27	1.56	0.82

2014년 기준 충남 벤처기업의 평균 국내시장 점유율은 11.80%로 수도권보다는 낮았으나 기타시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해외시장 점유율도 수도권보다는 낮았으나 기타시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무역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등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력산업 위주지원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표 39〉 매출구조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대기업 또는 대기업그룹사	12.94	13.29	11.65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19.29	16.48	14.66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41.99	41.48	42.42
소비자	3.00	6.16	5.88
정부	15.35	13.95	18.15
해외	7.42	8.64	7.23

충남 벤처기업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납품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자기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은 수도권이나 기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사브랜드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자 매출(B2C)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0〉 원자재나 부품 수입여부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수입 있음	27.04	29.27	23.51
수입 없음	72.96	70.73	76.49

충남 벤처기업의 27.04%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표 41〉 원자재나 부품 수입국가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미국	20.73	20.19	18.64
일본	9.97	15.29	23.24
중국	38.09	33.73	32.08
러시아	0.00	0.40	0.36
동남아시아	13.01	8.02	8.89
유럽	15.55	18.22	13.08
중동	0.00	1.02	0.36
캐나다	0.00	1.60	1.04
중앙아시아	0.00	0.29	0.15
오세아니아	0.00	0.42	1.44
아프리카	0.00	0.82	0.71
남아메리카	2.65	0.00	0.00

충남 벤처기업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순이며 수도권이나 기타시도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중 FTA로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교류, 중국시장조사,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표 42〉 수출형태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직접수출	22.48	19.16	17.6
간접수출	1.23	0.96	1.28
직접수출+간접수출	7.11	7.66	7.38
전혀없음	69.18	72.22	73.74

충남의 직접수출 비중은 22.48%로 수도권이나 기타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3〉 해외진출 여부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해외 진출	19.67	27.78	20.22
해외 미진출	80.33	72.22	79.78

그러나 해외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하고 기업경영 활동을 하는 해외 진출 비중은 19.67%로 수도권이나 기타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성숙기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브랜드 보유개수가 적고, 해외진출 비중이 낮은 것은 기업의 규모화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기의 벤처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 때 규모화를 위한 벤처집적지구의 선정과 벤처타운의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해외진출 지역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미국	0.00	18.31	17.22
일본	5.79	11.68	8.33
중국	36.14	18.18	26.03
러시아	0.00	3.58	4.12
동남아시아	44.55	12.50	25.17
유럽	0.00	11.79	10.31
중동	13.52	5.65	5.49
캐나다	0.00	3.35	0.59
중앙아시아	0.00	5.05	0.00
오세아니아	0.00	2.09	1.37
아프리카	0.00	2.91	1.37
남아메리카	0.00	4.92	0.00

충남 벤처기업의 주요 진출지역은 동남아시아가 44.55%로 수도권이나 기타시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중국과 중동이 각각 36.14%, 13.52%로 다음 순이다.

〈표 45〉 직간접 수출지역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미국	9.38	12.52	13.71
일본	12.71	14.47	15.73
중국	34.34	19.82	22.55
러시아	2.61	4.48	4.12
동남아시아	21.51	18.39	20.55
유럽	4.64	10.28	9.94
중동	4.25	6.14	5.59
캐나다	1.78	1.98	0.94
중앙아시아	1.91	3.25	1.91
오세아니아	1.78	2.45	0.85
아프리카	1.66	2.91	1.10
남아메리카	3.44	2.82	2.8

충남 벤처기업의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이 34.34%로 수도권이나 기타시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동남아시아와 일본이 다음 순으로 나타난다.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으로의 진출이 활발한 만큼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중국, 일본 위주의 수출지원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시아나 중동을 위한 수출지원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해외시장 진출과정의 애로사항

(단위: %)

	충남	수도권	기타
기술력 부족	13.49	12.43	20.55
무역 전문인력 부족	16.00	13.11	15.39
시장정보 부족	15.54	25.80	20.06
해외진출 필요자금의 부족	22.54	27.94	21.80
수출관련 절차적 규제 부담	14.73	7.33	8.80
언어 장벽	5.78	2.61	4.33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획득의 어려움	6.89	6.49	5.25
기업 신인도 부족	5.03	3.72	3.49
기타	0.00	0.56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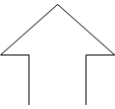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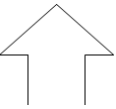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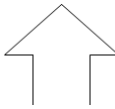

충남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진출 필요자금 부족이 2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역 전문인력부족, 시장정보 부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도 일반 중소기업처럼 자금부족과 무역 전문인력의 부족이 해외시장 진출과정의 애로사항이다. 따라서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인력 양성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전문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현황	신생 벤처 부족 → 창업교육강화(도전정신 및 사업화 동기 함양) 제조업기반 중심 → 지식기반중심으로 구조변화 필요
------	--

	투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① 융자위주의 지원구조, 열악한 R&D 자금 ② 제조업 기반 설비투자 중심 ③ 스톡옵션활용 미흡
대응방안	① 충남 엔젤투자펀드의 확대와 충남 벤처캐피탈 설립 ② 설비투자 중심에서 R&D투자 중심으로 생태계 유도(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중심으로 생태계 유도) ③ 스톡옵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필요

	생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① 부족한 CT(문화컨텐츠) 분야 ② 산업재산권 및 해외규격 획득 미흡 ③ 초보탈출 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 ④ 기술경계선상에 있는 한계 벤처기업이 많음(특히 디자인, 품질경쟁력 취약)
대응방안	① IT, BT, ET 등 다양한 기술이 공존하는 지역이니 만큼 기술의 융합화 및 CT의 전략적 육성 필요 ② 민간 컨설팅 등의 전문가를 통해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 등을 대행하고 인증획득 비용에 대한 지원 ③ 보육기관을 벗어난 벤처기업이 새로운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타운(지식산업센터)의 건설이 중요 ④ 벤처기업의 R&D를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구조성이나 R&D 융복합 센터의 조성이 필요

	마케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① 낮은 브랜드 파워(낮은 브랜드 개수) ② 자체 유통망을 통한 직접영업 ③ 포괄적 수출지원(벤처를 위한 별도의 지원없음) ④ 미국, 중국 위주의 수출지원 ⑤ 부족한 수출전문 인력 ⑥ 규모화 실패(자사브랜드 보유수가 적고, 해외진출 비중이 낮음)
대응방안	① 자사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자 매출(B2C) 확대 ②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활용 → 충남 농사랑에 벤처창구 개설 ③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무역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등 프로그램 개발 필요 ④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동남아시아나 중동으로의 수출지원도 필요 ⑤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내 벤처기업 전문 프로그램 개발 ⑥ 벤처집적지구 조성 및 벤처타운 건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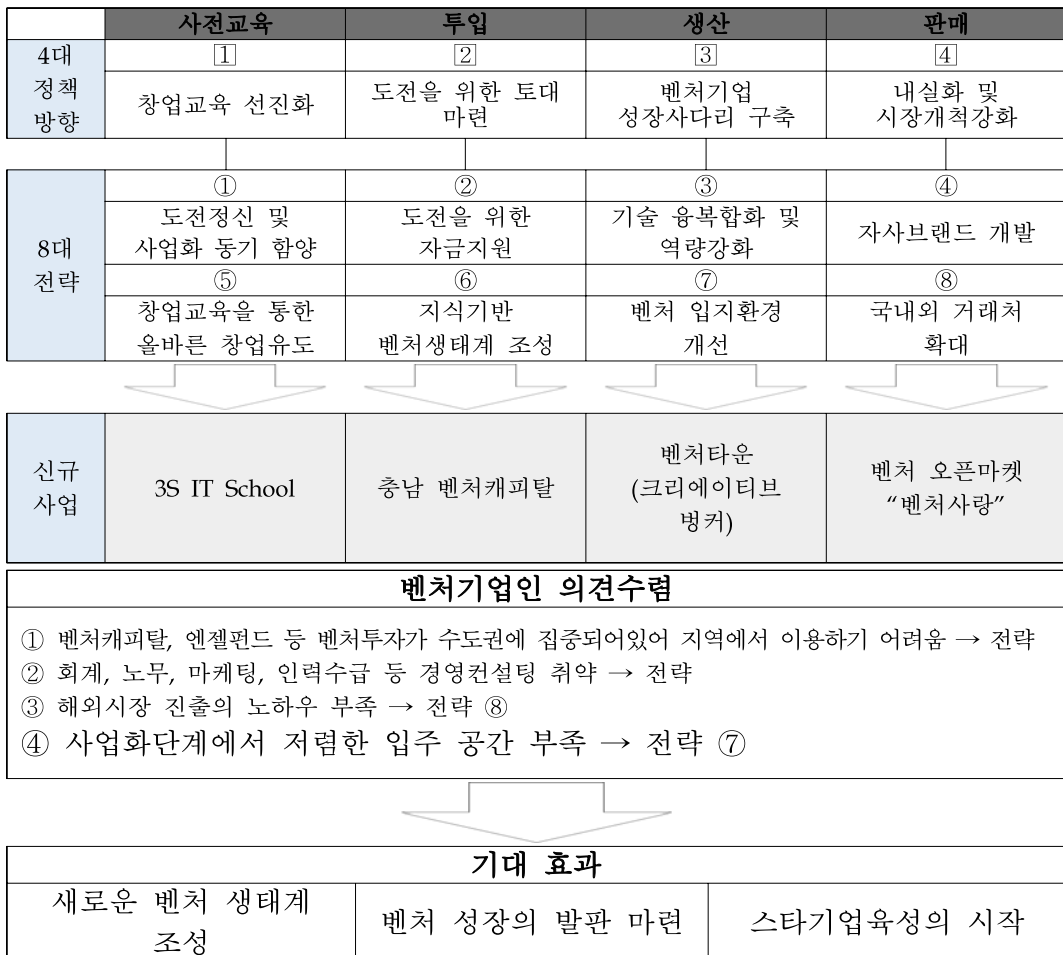
	문제점		대응방안
벤처 환경	신생 벤처 기업을 위한 토대 미흡		창업교육강화(도정정신 및 사업화 동기함양)
	제조업기반 중심		지식기반중심으로 구조변화 필요
투입	용자위주의 지원구조, 열악한 R&D 자금		충남 엔젤투자펀드의 확대와 충남 벤처캐피탈 설립
	제조업 기반 설비투자 중심 스투업선활용 미흡		설비투자 중심에서 R&D투자 중심으로 생태계 유도 스투업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필요
생산	부족한 CT(문화컨텐츠) 분야		IT, BT, ET 등 다양한 기술이 공존하는 지역이니 만큼 기술의 융합화 및 CT의 전략적 육성 필요
	산업재산권 및 해외규격 획득 미흡		민간 컨설팅 등의 전문가를 통해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 등을 대행하고 인증획득 비용에 대한 지원
	초보탈출 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		보육기관을 벗어난 벤처기업이 새로운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타운(지식산업센터)의 건설이 중요
	기술경계선상에 있는 한계 벤처기업이 많음(특히 디자인, 품질경쟁력 취약)		벤처기업의 R&D를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R&D 융복합 센터의 조성이 필요
마케팅	낮은 브랜드 파워(낮은 브랜드 개수)		자사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자 매출(B2C) 확대
	자체 유통망을 통한 직접영업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활용 → 충남 농사랑에 벤처장구 개설
	포괄적 수출지원(벤처를 위한 별도의 지원없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무역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등 프로그램 개발 필요
	미국, 중국 위주의 수출지원		충남 벤처기업의 경우 동남아시아나 중동으로의 수출지원도 필요
	부족한 수출전문 인력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내 벤처기업 전문 프로그램 개발
	규모화 실패(자사브랜드 보유수가 적고, 해외진출 비중이 낮음)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집적지구 조성

제5장 충남 벤처기업 육성 방안

1. 비전

충남의 성장을 견인할 강한(굳센) 허리 ! 창조벤처기업

2. 정책방향



1) 창업교육 선진화

충남의 창업교육 선진화 전략은 첫째, 창업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 정신 및 사업화 동기 함양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하며, 도전정신과 열정을 갖춘 기업가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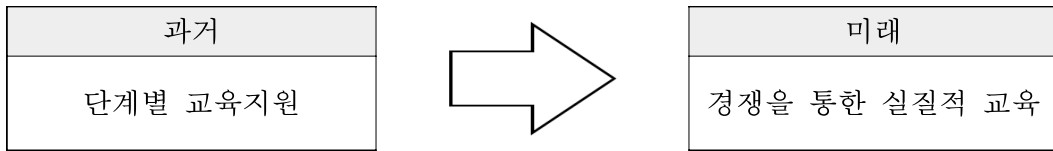
◆ (사례1) '13년 참가자인 허유리 학생(경희대 도예과 진학)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경험 및 지식이 진학 및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고, 실전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도자기를 소재로 해외수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음

◆ (사례2) '13년 참가자인 최진환 학생(삼성전자 취업)은 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자료:<http://blog.naver.com/sbnews777/220018833943>

둘째, 창업교육을 통한 올바른 창업유도이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창업 지원기관(신기술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충남 각 센터의 창업교육기능 강화하여 형식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47>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 도전을 위한 토대마련

도전을 위한 토대마련을 위한 전략으로 첫째, 벤처자금 지원을 제시할 수 있다. 벤처 자금 지원 방안으로 우선 충남엔젤매칭펀드 확대를 들 수 있다. 현재 충남엔젤매칭펀드는 도비 10억을 포함해 총 50억 규모이나 이는 충남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른 방안으로는 벤처캐피탈의 형성을 들 수 있다.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수익창출을 최종 목표로 설립되는데 대기업, 은행권 등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도에서는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간접적 지원하는 것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벤처자금 확보·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시설자금(20억원) 및 경영안정자금(3~5억원) 등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의 사업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억 원 이하의 혁신형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전략으로는 지식기반 벤처생태계 조성을 들 수 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지원하며, 특히 정보종합컨설팅 지원 및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우수기술 거래 및 사업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학연 간 정보공유 및네트워킹 등 협력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벤처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충남의 생산측면의 벤처기업 정책 방향은 첫째, 기술융복합화 및 역량강화를 들 수 있다. 충남은 IT, BT, ET 등 다양한 기술이 공존하는 지역이니 만큼 기술의 융합화 및 CT의 전략적 육성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벤처 입지환경 개선정책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식기반 벤처 전용공간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벤처창업 창조공간(Creative Space) 조성시 창업 초기단계 지식기반 벤처(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등)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 강화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 벤처전문 우수 컨설팅 인력을 확보하여 신생기업 컨설팅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벤처기업인 전용 입주공간 확보를 들 수 있다. 이는 벤처창업 창조공간(Creative Space²⁾) 조성하여 창업 초기단계부터성장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정착사각지대에 있는 벤처기업의 지속성장 공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내실화 및 시장개척

판매측면의 전략으로는 첫째, 자사브랜드 개발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내 벤처기업 공동브랜드 제작을 통해 마케팅 지원이나 벤처·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포장 등 이미지 제고를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하는 것으로 브랜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내외 거래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충청권 벤처·중소기업 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내 우수기술 제품전시, 국내·외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 등 지원하거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벤처기업 참여 보장하는 것을 통해 수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벤처사랑' 오픈마켓을 구축하여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로개척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벤처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공간(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을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 권오혁, 신동호(2000),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접근”,
김진근, 최원옥(2008), “경남의 벤처기업현황과 정책과제”,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김홍기(2014),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이윤준(2011),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STEPI
임윤철, 정재용, 양현모 (2005), “새로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벤처)정책 발굴연구
-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과 벤처기업활성화 관점에서”, 조사연구,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임형규 (2015), “창조적 미래를 위한 투자, 벤처 육성 정책 - 글로벌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정보과학회지, 한국정보과학회
임형빈(2014),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충남연구원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양중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략연구 2016-10 · 충남 벤처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기업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글쓴이 · 김양중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63(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59

ISBN · 978-89-6124-351-3 03350

<http://www.cn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